20 10:00~10:20

노숙인의 경제생활 : 생계유지, 사회지원과 복지제도

국립대만대학교 사회공작과 첸리첸교수, 첸리즈, 구등유

타이완 내정부 통계에 의하면, 조사 보고된 유민(遊民;노숙인)의 수는 2011년 3천에서 4천명정도라고 한다. 그러나 유민의 특성상 고정된 거주지가 없으므로 실제적으로 학계에서 조사한 결과는 약 10배가 넘는 숫자라고 한다. 최근들어 정부에서 유민의 생활에 대한 관심으로 대 유민서비스가 긴급성 물자제공 또는 수용 배치에서 점점 과도성 단계인 취업알선과 주거안정서비스로 발전하고 있다. 그 예로 타이페이 시정부에서 추진하는 「유민 취업보조 및 생활중건방안(補助遊民工作暨生活重建方案)」은 주로 노인 유민의 거주 배치와 청장년 유민의 일자리복귀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또한 「유민 건강보험진료 및 진료접수 협조 계획(協助遊民健檢門診與辦理醫療掛帳計畫)」을 진행하여 진급한 진료가 필요한 유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수용 배치된 유민의 수는 극히 일부이며, 아직도 많은 유민들이 지붕없는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간은 생존을 우선으로 한다고 가정하면 이러한 외부의 노숙인들의 경제생활은 어떻게 유지되고 있을까? 그들은 어떻게 매일 생계(끼니)를 유지하는가? 소득은 어떻게 벌어들이는가? 그들의 소비형태는 어떠한가? 현재 사회복지제도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매일의 생계는 외부의 노숙자들의 경우, 눈뜨자마자 먹을거리를 걱정하게 되며 이는 곧 매일 대하는 생명의 위기와도 직결된다. 그들은 유민 사이의 네트워크를 통해 음식이 제공되는 곳-예를들어 지방정부의 복지서비스센터, 민간의 구호활동, 종교단체의 구호활동 등-을 인지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매일 음식을 제공받는것이 가능하지만 행동이 불편한 유민의 경우는 음식이 제공되는 장소에 나가지 못해 건강이 악화되기 쉽다. 또한 일부 유민은 일자리 기회가 있어 그 소득으로 먹거리를 구매하기도 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소득이 없으므로 장기적인 일자리를 가지기 전까지 무료음식제공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대다수의 유민들은 흡연 음주로 인해 소득을 지속적으로 저축하기 어렵다.

의복의 경우 외부에서 생활하는 노숙인들의 경우 어렵지 않게 의복을 제공받거나 세탁할 수 있다. 또한 의복의 단정은 곧 일자리와도 연계되므로 그들의 입장에서 외모정결의 유지가 외부의 편견을 대항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외숙의 경우 대부분의 유민들은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지하 공공공간, 빈집, 공원정자, 기차역, 수용소, 주택외부공간등-을 선택하여 노숙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간을 고정된 지역이 아니지만 복지서비스인원(外展工作人員)에 의해 발견되기 쉽다. 수용소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외부 유민들은 규칙의 준수, 금주, 금연, 소등시간 등을 이유로 외부의 공공공간을 선호하는 편이다.

교통의 경우, 외부 노숙인들은 취업기회를 위해 역전이나 공원에서 모여 머물기를 선호한다. 특히 지방에서 온 유민의 경우는 기차역을 선호하며 지방의 일자리를 얻어 기차를 이용해 이동하기를 희망한다. 또한 어떤 유민들은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나 삼륜차를 이용하여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거나 개인물건을 보관하기도 한다.

소득의 경우, 대부분의 유민은 적게라도 소득의 기회가 있으며 참여하는 취업종류는 비전통노동시장의 임시공, 관고전단, 광고판 전시, 환경미화, 종교활동참가 등이다. 그러나 고정된

일거리가 아니고 일당은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되며 하루에 600~1600원 정도이다. 이들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이유는 과거 노동조건(학력, 전과, 대출, 고령자, 신체, 금주, 무주거지 등)이 불리함을 이유로 들 수 있으며 또한 장기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저소득, 65세 노인자격, 심신장애 등으로 복지자격을 받는자들은 정부로 부터 받는 소득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수용소나 기관에 오기를 거부한다.

사회지원의 경우 독립적인 성격의 유민 외에 대부분은 두세명에서 많게는 여덟명이 모여 거주하며 보호, 정보교환, 재무손실의 위험으로부터 서로 돕고 지낸다. 나이에 관계없이 성격, 취미, 취업기회 등이 주요 결집의 요인이 되며, 집단생활을 하면서 그 날 일자리 기회를 가진 자가 저녁에 돌아와 소득을 나누거나 음식이나 술을 나누며 고독감을 해소한다.

간략히 말하면, 외부 노숙인들은 거의 경제적인 생존법칙을 가지며, 주동적으로 의식주를 해결하는 책략을 가지고 집단생활을 통해 그들의 사회 네트워크를 형성해 정보교환과 친분을 유지한다. 그러나 불리한 노동조건으로 인해 정식 노동시장에 투입될 수 없으며, 수용소의 관리규칙에 따르기 어려워 노숙을 지속할 수 밖에 없다.

20 10:20~10 : 40

한국의 노숙인 정책의 변화와 실태

이정규
홈리스정책연구센터 연구원

1. 노숙인 복지법 시행에 따른 한국 노숙인 정책 방향의 변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으로 인한 한국의 노숙인 정책은 큰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 주요한 변화의 골자로 노숙인에 대한 정책적 범위의 확장, 노숙인 지원의 국가책임 명시, 노숙인 지원의 전략적 접근 환경 조성, 노숙인 시설체계 개편 등을 주로 제시할 수 있다.

1) 노숙인 정책 범위의 확장

노숙인 복지법에서는 기존 사회복지사업법 내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운영규칙에서의 노숙인의 정의를 확장하여 적용하게 하고 있다. 노숙인 복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노숙인의 정의는 '상당한 기간동안 일정한 주거없이 생활하는 사람'과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동안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의 내용에 '상당한 기간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이다. 이는 거리노숙인이나 시설보호 노숙인과 더불어 잠재적인 노숙인을 포괄하여 정책의 범위를 확장하게 하였다.

2) 노숙인 지원의 국가 책임 명시

노숙인에 대한 국가지원의 책임이 명시됨에 따라 각 행정부서간 노숙인 지원을 위한 협력의 근거가 되고, 민간협력을 통한 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노숙인 지원에 있어서 주거지원의 영역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노숙인 지원과 관련한 행정부서의 주거확보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 동안 국가의 주택관련 부서에서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노숙인 등의 주거지원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향이 짙었으나, 노숙인 복지법의 시행을 계기로 노숙상태에 있거나 위험에 봉착한 인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이에 대한 주거 확보가 용이해졌다.

3) 노숙인 시설체계의 개편

그 간의 한국의 노숙인 복지정책은 사회복지사업법 내의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운영규칙(2004 년 개정)'에 의해 시행이 된바 있다. 이 법령내에서는 '부랑인'과 '노숙인'의 정의가 이원화되어 있으며 관리체계 또한 이원화(부랑인지원체계 : 중앙정부 / 노숙인지원체계 : 지방정부)되어 운영되어 왔다. 노숙인 복지법이 시행되면서 이원화된 지원체계의 법적인 통합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행정체계는 기존과 동일하게 이원화 되어 있는 상황이다.

2. 한국 노숙인의 규모

1) 집계된 전체 노숙인은 13,262 명

2012 년 10 월 16 일과 17 일에 걸쳐 진행된 전국노숙인실태조사에서 확인된 거리노숙인과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인원은 모두 13,262 명이며, 인구 1 만명당 약 2.73 명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이 중에서 거리에서 노숙을 하는 사람은 1,811 명이고 노숙인 시설에서 거주하는 사람은 11,451 명이다. 노숙인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 일시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554 명, 노숙인 자활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2,713 명, 노숙인 재활 및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은 8,184 명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노숙인 재활 및 요양시설의 이용자이다. 노숙인 재활 및 요양시설 이용자는 8,184 명으로 전체의 62%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노숙인 자활시설이 2,713 명으로 20%, 거리노숙인이 1,811 명으로 14%, 일시보호시설이 554 명으로 4%를 각각 보인다.
지역별 거리노숙인과 노숙인시설의 분포를 살펴보면 거리노숙인은 서울, 경기, 대구, 인천, 부산, 대구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다. 또한 일시보호시설은 거리노숙인이 100 명 이상 존재하고 있는 인천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되어있고, 특히 서울지역에 많은 수가 분포하고 있다.
노숙인의 전국 분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대규모 노숙인 재활 및 요양시설이다. 노숙인 재활 및 요양시설의 이용자는 서울지역에 가장 많이 존재하고 있지만, 경남, 대구, 충북, 경기 등의 이용자의 수도 높게 나타난다. 이는 해당지역에 대형시설이 있기 때문이다.

2) 확인된 거리노숙인은 1,811 명

거리노숙인 일시집계조사를 통해 확인된 거리노숙인의 수는 모두 1,811 명이다. 그 중 남성은 1,685 명으로 전체의 93.04%이며, 여성은 121 명으로 6.68%이다. 외관상으로 성별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는 총 5 명으로 전체 거리노숙인 중 0.28%이다.

각 광역자치단체별 거리노숙인의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지역이 964 명으로 가장 많은 거리노숙인이 존재하였고, 경기도가 227 명, 대구지역이 127 명, 부산지역이 101 명으로 집계되었다. 각 지역의 거리노숙인 수의 비율은 서울지역이 전국 거리노숙인의 53.23%, 경기도는 12.53%, 대구지역과 부산지역이 각각 7.01%와 5.58%를 차지하였다.

인구 1 만명 당 거리노숙인의 수는 전국적으로 0.36 명이며, 서울지역이 0.98 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대전지역이 0.59 명, 대구지역 0.52 명의 순으로 나타난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 상대적으로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는 총 111 지역의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거리노숙인을 집계하였으며 19 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거리노숙인이 발견되었다. 거리노숙인이 가장 많이 존재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서울시 용산구로 297 명이었고, 서울시 중구가 171 명, 영등포구 132 명, 종로구_75 명 순이다. 그 외 지역으로 경기도 수원시가 122 명, 충남 천안시가 72 명, 대구시 북구가 63 명으로 집계되었다.

3) 시설 입소 노숙인은 11,451 명

이번 조사를 통해서 파악된 전국의 노숙인 시설 이용자는 모두 11,451 명이며 이중 남자는 8,612 명으로 전체의 75.2%를 차지하였고, 여성은 2,839 명으로 24.8%이었다.
노숙인 시설의 유형별 현황은 일시보호시설 이용자는 550 명, 노숙인 자활시설은 2,649 명, 노숙인 재활 및 요양시설은 8,219 명, 기타시설은 33 명이다.
이용자 성별 유형은 일시보호시설은 남성이 534 명으로 97.09%, 여성이 16 명으로 2.91%를 차지했다. 노숙인 자활시설은 남성이 2,476(93.47%)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노숙인 재활 및 자활시설 또한 남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여성이 2,650 명(32.24%)으로 타 시설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 별 지역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지역이 3,323 명(29.02%)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652 명(14.43%), 대구 1,220 명(10.65%)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규모 노숙인 시설의 지역별 분포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지역별 이용자 성별의 차이를 보면 남자의 경우 서울지역이 34.49%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반면, 여성의 경우 경기지역이 24.06%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인다.

4) 정신과적 개입이 필요한 인원은 시설입소자의 22.4%

전체 노숙인 시설 이용자 11,451 명 중에 심각한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인원이 2,567 명이었고. 노숙인 시설이용자의 22.4%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또한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인원의 51.5%가 여성으로 나타나고 있어, 시설 이용의 다수는 남성이 차지하고 있으나, 정신질환자의 비율은 여성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노숙인 자활시설에 비해 노숙인 재활 및 요양시설에 정신질환자가 더 많이 분포하고 있다. 노숙인 재활 및 요양시설 전체 이용자 8,219 명 중 2,397 명(29.1%)이 심각한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숙인 재활 및 요양시설에서도 여성의 정신질환 유병율이 전체 여성입소자의 48.26%로 나타나 남성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다.
알코올 및 약물중독의 비율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매우 낮게 조사되었다. 전체 시설이용자 중 알코올 및 약물 중독자는 810 명으로 7%로 조사되었다. 노숙인 시설별로 노숙인 재활 및 요양시설이 613 명, 노숙인 자활시설이 197 명이다.

3. 나가며

노숙인의 실태조사 등을 통한 자료의 축적은 노숙인 정책을 평가하고, 정책의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해준다.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에서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민간영역의 의지는 매우 강했지만, 제한된 자원 때문에 높은 수준의 결과물을 만들어내지는 못하였다. 앞으로 보다 개선된 조건 속에서 수준 높고 신뢰할 수 있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민관협력의 구조 속에서 노숙인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정기적으로 생산된 자료의 축적은 전국적인 노숙인 규모의 추이를 확인하게 하고, 정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게 하며, 향후 정책의 수요를 판단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번 전국노숙인실태조사는 조사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수행되었다. 그러다보니 조사지역이나 조사인력을 필요한 만큼 확보할 수 없었다. 조사의 사각지대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이다. 또한 날씨나 기온 등의 영향으로 평소보다 발견된 노숙인의 수가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요인들은 차후 조사를 통하여 노숙인의 증감을 판단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0 10:40~11:00

와이 퉁 홍콩 커뮤니티조직 SoCO

Homeless Issue in Hong Kong, 2013

	Existing Problem	Existing Services / Policies	SoCO's Suggestion
Policies on Homeless	No. of Homeless people in HK is underestimated (Gov't Statistic in Oct 10: 525)	Official homeless registration form (SWD 386) ***cannot*** show the people who are being homeless < 1 month or in the same location < 7 days	Reinstates the'men-counting format' before 1997 to count the total no. which helps to achieve the better planning on homeless service
	30.4% have exp. to be disturbed by police / security guard; 20% have difficulty to find job due to no fixed address	Gov't does not have policies to protect the homeless people	Follows and implements the Japan homeless policies and law
	17.6% being homeless after discharged from jail / hospital / drug rehab centre	Gov't does not allow the EXOs to apply CSSA 1 month before the discharge	Allows the people with difficulties to apply CSSA before the discharge
Employment	52.4% are 're-homeless' people (i.e. relapse rate)	It shows the job instability: re-unemployed → re-homeless	Revokes the 'contract-out' and contract employment system
Accommodation Services	38.8% are low-income homeless people	Gov't has revoked its subsidy on singleton hostels (monthly rent: $430) in 2005	Reinstates the subsidy on singleton urban hostels
Welfare System (i.e. CSSA – Comprehensive Social Security Allowance)	17.5% are returned from Mainland China, but 29.7% of them have been rejected to apply the CSSA	Gov't deprives the rights of the people who live in HK less than 309 days a year to apply CSSA (2004 -2012)	Since SoCO Win the court case on Feb 2012, such restriction on CSSA application have been cancelled
	Some homeless people have the needs on glasses and teeth treatment	Gov't revoked the special subsidies of CSSA's recipients who are < 60	Reinstates the special subsidies for CSSA recipients to facilitate them to get jobs
	77.7% cannot afford the rent payment of private	The CSSA rent subsidy has been cut from	Reinstates the CSSA rent subsidy to $1,505

	housing; 40.8% cannot afford the rent deposit	$1,505 to $1,265 since 2003; and no rent deposit anymore	and provides the subsidy on rent deposit
Public Housing Policy	78.7% complains the long waiting period of public housing application	The Housing Dept. has implemented 'non-elderly singleton point system' since 2005	Builds more public housing so as to shorten the waiting period
Mental Health	75.3% homeless people ranked themselves of 6 points or above.	Some parts of "Hospital psychiatric outreach team" are not willing to diagnosis the homeless people in public Area, like on the street.	To reinforce the "Hospital psychiatric outreach team" and visit the homeless people where they usually appear with the assistance of the four "Homeless outreach teams"

Working Experience

1990 – 1992 Organizing Elderly in Public Housing Re-development Issue
1992 – 1997 Organizing Elderly in poverty on Social Welfare Issue & Social Security Issue
1997 – 1999 Organizing Elderly Working Poor
1999 till Now Organizing Homeless, Ex-offender, Working Poor to fight for their right
2005 till Now Organizing Hong Kong Homeless Football Team in Hong Kong

Research

1999 2010 2012 Homeless Survey X 3
2003 2005 2008 Ex-offender Survey X 3
1999 2000 2012 Working Poor Survey X 3
1999 – 1997 Research on Elderly in Poverty X N

Education Background

1990 Degree Holder of Economics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2001 Master of Social Work Hong Kong University

20 11:20~11:40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거리노숙인 지원체계의 변화

-알코올 및 정신질환 노숙인 정신건강상담을 중심으로-

서정화 (전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장)

Ⅰ. 「알코올 및 정신질환 노숙인 정신건강상담」 위기관리팀 출발의 배경

1) 법제정 이후 달라진 정책 환경

2011 년 6 월 국회에서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이 제정되었고, IMF 를 계기로 응급구호사업으로 시작된 지 14 년여 만에 노숙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정책수립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더불어 2005 년부터 지방정부 이양되었던 노숙인 복지서비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관심이 증대되었고, 법제정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한 민.관 전문가들의 논의들이 진행되었다.

2) 코레일의 “서울역에서의 노숙인 퇴거조치” 발표를 계기로 만성적인 거리노숙인 문제에 대한 관심 증대

1998 년 이후, 노숙인에 대한 정부의 주된 정책적 지원은 시설보호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립지원이었으며, 정신질환 및 알코올 문제를 가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심리적,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 매우 악화된 상태에서 몇 년씩 장기간 거리 생활을 하고 있는 노숙인들에 대한 관심은 적었다.

노숙인의 정신건강을 연구한 학계의 보고서들에 의하면 노숙인의 알코올의존 유병률은 29.62%~62.6%로 조사되어 일반인의 알코올 의존율보다 3 배 이상 많게는 8 배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학계와 민간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었으나 정부의 정책적 관심대상은 아니었다.

2011 년 7 월 코레일의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조치” 이후로 거리노숙인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정신질환 및 알코올 문제로 거리에서 만성화되고 있는 노숙인들이 사회적으로 노숙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한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부터, 이들에 대한 대통령 및 중앙정부의 관심이 증대되었다. 더불어 만성적인 거리노숙인은 자활관점의 대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재의 상담보호센터와 쉼터 지원체계 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다.

3) 「서울역 노숙인 퇴거대책 추진 방안」 민관협력 TF 구성

- 민관협력의 시작

2011 년 8 월 22 일, 보건복지부 민생안정과, 서울노숙인복지시설협회, 전국홈리스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모여 서울역 노숙인 퇴거대책으로 이슈화된 정신질환 및 알코올 문제를 가지고 있는 노숙인에 대한 지원책 마련의 필요성을 공유하였다.

“서울역 거리노숙인 퇴거 조치를 계기로 돌아본 노숙인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면서 “정신과 의사와 정신보건 전문요원 등” 정신보건 전문가의 거리노숙 현장 상담활동의 필요성과 제도화 이전에 민간차원에서 시범 활동의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 민관협력회의 운영(2011.8.29.~11. 9. 총 6 차례 회의 진행)

. 「서울역 노숙인 퇴거대책 추진 방안」 민.관 협력 TF 회의 운영

. 참여기관 : 보건복지부 민생안정과 , 정신건강정책과, 서울시 자활지원과, 서울경찰청, 코레일 여객본부, 코레일 서울역, 시설협회, 전국홈리스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등이 회의에 참여

-「거리노숙인 위기관리팀」 구성 운영을 위한 각 기관별 역할분담 및 협조 사항

. 총괄 : 보건복지부 민생안정과

. 서울시 : 정신보건 위기관리팀 현장활동을 위한 공간 마련(서울역 광장에 신축)

. 시설협회 : 위기관리팀의 현장전문가 모집 및 운영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홈리스대책위원회 : 정신보건의료인등 민간의료 자원봉사자 모집

. 경찰 : 응급입원 등 거리노숙인 응급구호 협조

Ⅱ. 2011-2012 민간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위기관리팀」 구성과 시범 활동

1) 위기관리팀 구성

-정신과 의사 2 명, 정신보건 전문요원(간호사 1,사회복지사 1), 심리학 박사, 내과의사, 사회복지사 등 총 13 명의 팀원으로 구성
-보건복지부 장관 “거리노숙인 위기관리 자원봉사자 위촉식”(2011. 11. 14)

2) 활동 목적
서울역 인근의 만성적인 정신질환 및 알코올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리 노숙인에 대한 정신보건 분야의 전문 개입을 통하여 만성적인 거리노숙인 문제 해결의 방안을 찾고자 함.

3) 활동시기 및 방법
2011. 11. 15. ~ 2012. 2. 29 까지 활동, 주 3 회(화.수.목) 19:30~22:30
정신과 의사 등 위기관리팀이 직접 거리노숙인을 찾아가서 상담활동을 진행하였으며, 관계 형성 후에는 정신과 의사들이 상담실에서 상담활동 진행을 병행함.

4) 활동의 결과
.총 상담 514 명, 활동 참여 연인원 363 명(위기관리팀 외에 시설협회, NCCK 등 참여)
.병원 입원 20 명(알코올 15 명, 정신분열 5 명(전문가에 의한 응급입원 3 명 포함)), 고시원 지원 6 명, 시설입소 53 명,

Ⅲ. 2012-13 년도 거리노숙인 정신건강개입을 위한 위기관리팀 활동 확대 운영

1) 보건복지부의 정책 사업으로 「위기관리팀」 운영 상시화
. 2012 년 11 월부터 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지역에 위기관리팀 활동 시작
. 팀구성 : 사회복지사 1 명 정규직, 민간자원봉사 의료진 및 정신보건 전문가 넷트웍 활용(지역내 알코올상담센터 연계 등), 인권전문가 등

2) 서울특별시의 경우, 2012 년 12 월부터 「정신보건 전문상담팀」 구성 운영
. 정신과전문의를 촉탁의로 임명, 주 3 회 야간 아웃리치 상담활동
(자원봉사 정신과 전문의 1 명, 촉탁의 1 명 등 2 명의 정신과 의사가 활동)
. 정신보건 전문요원 2 명, 사회복지사 1 명을 1 팀으로 편성하여, 서울지역내 2 개팀이 거리노숙인에 대한 전문상담 활동을 통하여 응급입원, 시설연계, 치료연계 등의 활동을 하고 있음.
. 1 일 쪽방 10 개를 지원하여, 필요시 먼저 주거를 지원하고 상담활동을 지속하면서 치료연계 활동
. 서울시 전역에서 응급콜(1600-9582)로 지원요청을 하면 정신보건 전문팀이 파견되어 상담활동을 지원하고, 필요시 의료진이 재방문을 하며 입원 등의 조치를 하며, 입원 이후 사회복지사가 지속적으로 연계 활동

3) 활동의 결과(2012. 11~ 2013. 1.18)
상담아웃리치 492 회, 상담 930 회(정신질환 및 알코올상담, 기타 일반상담)
서비스 제공 2,499 회(치료연계, 병원 입원, 시설입소, 약품제공, 주거지원, 정보제공 등..)
<2011-2012 년 활동 사진>

20 11:40~12:00

비주택 거주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제안

김준희(한국도시연구소)

비주택은 사람이 거주하는 시설 중 주택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거처 유형이면서 거주에 적합하지 않은 건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비닐하우스, 쪽방, 고시원, 여관·여인숙, 비숙박용 다중이용업소(PC 방·사우나·만화방·다방 등)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용된다. 그 중 1 인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대표적인 비주택 유형인 쪽방, 고시원, 여관·여인숙에는 2011 년 현재 쪽방 6,000 여명, 고시원 22 만여 명, 여관·여인숙 4 만여 명으로 전국에 약 27 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비주택의 물리적 환경을 살펴보면 건축허가를 받고 지어진 건물은 주로 벽돌과 같은 비교적 양호한 재료로 건축된 반면, 국공유지 등에 무허가로 지어진 건물은 나무, 판자, 흙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건축 재료와 상관없이 건물이 노후하여 누전이나 부주의에 따른 각종 재해에 취약한 실정이다. 또한 건물 내부를 분할하여 방수를 늘여서 운영하고 있는 건물에는 창문이 없는 방이 있고, 창문이 있어도 건물이 붙어있어서 환기가 거의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방음이 되지 않아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 이외에도 비좁고 어두운 복도와 가파른 계단 등의 구조적인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고, 방에서 간이 취사도구를 이용하여 식사를 해결하는 등 이용행태에서도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 등 거동이 쉽지 않은 여러 집단이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커지기 쉽다.

이처럼 대부분의 비주택은 거처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개입 수단은 현재 화재 예방을 위한 규제 이외에는 없고, 최근에는 고시원을 중심으로 비주택 거주자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비주택은 정책적으로 주목해야 할 대상이지만, 현재 적절한 대응 방향이 정해지거나 정책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비주택 거주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적 목표를 제시하며 앞으로 비주택에 대해 대응해야 하는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비주택 거주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거주가구에 관한 지원서비스 뿐만 아니라, 건물개량, 지역사회 재생, 주택정책 등의 포괄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주택정책에서 비주택에 대한 고려

비주택 거주가구의 규모는 전국 약 27 만명 정도이지만, 기존의 주거 관련 조사에서는 정확한 규모나 실태가 파악되지 않았다. 이러한 비주택 거주가구의 규모는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비주택 거주가구의 점진적 축소를 위해 비주택을 주택정책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러한 비주택 거주가구의 점진적 축소는 단기간 안에 해소될 수 없기 때문에 1 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거처 공급을 확대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임대용 거처의 최소 주거안전기준 마련

현재 비주택은 임대용 거처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관련 제도가 부재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주거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여러 가구가 함께 생활하는 거처가 갖추어야 할 최소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장기적으로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거처를 점진적으로 폐쇄해야 할 것이다.

구분	내용
실 면적	- 성인 1 인이 생활하는 방 하나의 최소면적은 6㎡ - 방에 취사시설을 설치할 경우 최소면적 등의 조건 따로 정해야 함
공용 화장실 및 욕실	- 6 명 당 샤워시설이나 욕조, 변기, 세면대가 갖추어진 욕실 1 개 이상 - 샤워실이나 욕실과 화장실이 구분하여 설치할 경우 8 명 당 각각의 시설 하나 이상

공용 부엌	- 공동취사를 하거나 숙박시설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엌이 없는 여러 가지가 이용하는 주거시설은 기준 면적 이상의 공용 취사시설을 갖추어야 함 - 6 명까지는 4㎡, 12 명까지는 6㎡, 이후 6 명 당 2㎡씩 증가함 - 식당이나 휴게공간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데, 현실적으로 인원이 많은 곳에서는 부엌의 일부를 활용할 수 있음.
안전	- 화재안전시설은 고시원보다 약하지만 설치가 용이하고 효과적인 대안 고려 - 출입구에서 출입자 통제나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 둘 것
위생, 편의시설	- 환기, 채광, 난방, 단열 등은 건축법 등의 기준 따름 - 이동약자를 고려한 편의시설은 취약집단을 위한 거처 제공시 적절히 고려

임대용 거처 등록 제도

비공식적 임대주택시장을 공식화하고,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수준의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임대용 거처 등록 제도를 도입해야 하고, 이를 통해 위에서 제시한 최소한의 주거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준수하지 않는 거처는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개입할 수 있다. 일반적인 임대용 거처의 등록에 앞서 비주택에 대한 등록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전면적인 실시에 앞서 단계적인 적용 방안을 고려하고, 몇 개 지역에 대한 시범 적용을 시도할 수 있다.

비주택 개량 시범사업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개선하고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지역사회 재생을 할 수 있는 정책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또한 우선적 고려가 필요한 취약집단의 주거안정과 양질의 거처 제공,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위한 지원주택 제공, 도심의 저렴한 거처 보존과 지역주택시장 변화로 인한 저소득층에 대한 충격 완화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비주택 개량 시범사업은 다양한 방식으로 재정적, 조직적 협력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중앙정부에서 관할하는 재원 특히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운영 및 지원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단계에서 고려해야 하며 사업성과에 대한 포함해야 한다. 사업은 건물의 소유자나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주체에게 충분한 옵션이 제공된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이라는 점에 대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과 공감이 필요하다.

지원주택 사업

건물 개량과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시도로 공공이나 비영리민간부문이 건물을 개량하거나 철거 후 신축하여 공적인 목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지원주택의 공급을 통해서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고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쪽방이 밀집한 지역과 그 인근에서 지원주택 사업을 실시할 경우 지역사회 재생을 위한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이 집중되어 있고 지역사회 재생의 필요성도 큰 지역에서 민간이 참여하여 거처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으로 진행해야 한다. 지원주택의 제공은 기존 건물이나 토지를 단기임대, 장기임대, 매입해서 활용하는 방안이 있지만 매입 방식이 가장 안정적이고 재정 투입 대비 장기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

비주택이 기본적인 수준의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간에서 스스로 개량을 하도록 유도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개량보조금, 융자 지원이 포함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주택 거주자 지원 사업으로는 주거지원서비스와 주거비 보조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지원은 주거지원서비스를 통하여 보편적인 상담과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주거비 보조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만을 목표로 하기 보다는 다른 정책 목표와 결합되는 것으로서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 12:00~12:20

찬 캄팀, 세인트 제임스

홍콩의 노숙자 불이익

- 소개
  - 홍콩의 노숙자에 대해
    - 노숙자 총수
    - 노숙자 지원과 현 정책
      - 정책
        - 공적부조 안전망 : CSSA 제도
        - 하우징 : 중간시설 (단기) 、공영주택 (장기)
        - 아웃리치 서비스 : 노숙자지원통합팀
      - 지원제도
        - 자선단체 (교회 등) 의 정기적 무료급식 활동

- 노숙자가 직면하고 있는 불이익
  - 행정적인 측면
    - 노숙을 금하는 조례등이 없음.
    - 하지만、노숙자는 많은 불이익에 직면하고 있음.
    - 바리케이트/벤치 분할(사진참고)
      - 육교 밑이나 공원 등
      - 공공 공간의 접근을 막는 방안
    - 클리어런스
      - 노숙하는 곳의 정기적인 청소
    - 경찰
      - 심야: ID 카드 확인
    - 중간시설 (호스텔) 의 부족
    - 공영주택 (일반시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취급)
      - 5 년 이상 입주대기기간 (성인)
      - 약 2 년의 입주대기기간 (고령자)
    - 공적부조안전망 : CSSA
      - CSSA 지급 금액(월)만으로는 기본적인 생활 니드를 충당 불가능
      - 일할 능력이 있는 성인의 경우 월 HK$2070
      - 도시락은 약 HK$30
    - 공원 개폐시간
      - 일부 공원은 밤 11 시에 폐문

  - 사회적인 측면
    - 스테레오 타입

- 전염병이나 정신장애가 있다는 이미지가 커서、 노숙자는 위함하다는 오해
- 노숙자 대부분은 약물의존자(홍콩사회는 약물의존자를 수용하지 않음)
- 민간 아파트로의 입주 어려움 (집주인에게 거부됨)
- 고용주도 노숙자는 고용하지 않음

◆ 주소를 증명할 것이 없음

- 보통의 경우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사회적으로 일반화되어 있음.
- 하지만、노숙자의 대부분은 소지하고 있지 않음
- 주소를 증명할 수 없으면, 은행계좌 개설도 불가능
- 고용주는, 특히 상근일 경우에 월급을 지급하는「자동이체」를 이용
- 결국, 노숙자는 일자리도 구하기 불가능한, 빈곤의 악순환에 놓임

◆ Cubicle

- 큐피클 아파트의 주거환경은 매우 열악, 특히 위생문제가 많음
- 큐피클 아파트의 임대료는 약 HK$1600-$2000 정도 드는 반면、CSSA 임대료 부조는 HK$1440 가 상한선

■ 결론

◆ 홈리스는、노숙 생활을 할 때 다양한 불이익에 직면하게 됨

◆ 행정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으로 나눌 수 있음

◆ 행정적인 측면보다 사회적 측면의 영향이 더 큼

20 13:20~13 : 40

고용불안과 양극화 시대 주거정책의 과제

서종균(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

1. 주거빈곤층의 증가

주거위기를 겪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홈리스가 계속 발생하고 고시원이나 사우나, PC 방 등에서 생활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노숙 경험자의 발생 규모는 1997 년을 전후로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 위기 국면에서만 노숙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노숙을 경험하는 사람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상당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고시원의 수는 최근 7 년 사이에 2.6 배로 증가했고, 거주자의 규모도 25 만 명을 넘는다. 고시원의 형태는 다양한데, 그 중 절반 이상은 매우 열악한 주거상황이다.
PC 방과 사우나 거주자의 규모는 6 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2. 왜 증가하는가?

고용 불안정은 주거위기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실업률만이 아니라 불안정한 고용 형태와 잦은 이직 등으로 일생에서 한두 차례가 아니라 수시로 위기를 경험하는 이들이 늘어났다.
소득은 양극화되고 주거비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시기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거를 통해서 부를 재분배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주거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착취가 심각해질 수도 있다.
채무는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가 되었다. 이것은 다시 문제가 되는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
가족 관계의 불안, 심리적 불안은 독립적으로 혹은 다른 요인들과 중첩되어 주거 위기를 초래하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

3. 주거정책에서 나타난 변화와 쟁점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증가하면서 시혜적 소규모 프로그램들이 등장했다. 맞춤형 정책이라고 선전된다. 하지만 이런 정책으로 문제의 규모가 실질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공공임대주택은 정치적으로 강조된다. 하지만 MB 정권 시기의 실제 공급 수준은 매우 낮았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은 주거빈곤층을 위한 자원 배분 수단의 기능이 매우 약하다. 정책의 방향 수정 없이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에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다.
주거비 보조에 대한 주장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이나 시민단체 등이 이를 요구하는 주체들이었고, 서울시가 앞서서 2012 년 1 만 가구에게 주거비 보조를 지급하고 있다. 중앙정부도 시범적인 실시를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의심스럽고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주장보다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은 여전히 주택정책에서 중요한 과제로 여겨지고 있다. 4 년째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부동산 경기를 고양시키기 위한 정책적 개입을 요구하는 세력이 존재한다. 이에 반해 주거빈곤층에 대응하는 것은 주거정책의 중심이 아니고, 그것을 주장하는 세력은 강하지 않다.
추상적 주거권 주장이나 제도 개선 요구는 있다. 하지만 주거권 운동이 주장하는 내용은 정부의 입장과 차별화되지 않는다.

4. 권리의 확대를 위한 과제

극단적 주거빈곤층 해소를 위해서 주거정책 자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해야 한다. 노숙 등 극단적 주거빈곤에 처한 이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주거정책의 자원을 배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를 제약하고 있는 기존 제도들은 신속하게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의 배분 체계와 국민주택기금이나 재정의 활용 방법 등이 개혁되어야 한다.

정보와 상담 서비스가 가능한 보편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위기 상황에 있거나 예방을 위한 특별한 개입이 필요한 집단에 대해서는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태를 파악하고 데이터를 축적해야 한다. 대상 집단이 얼마나 되고 성격은 어떠한지, 그리고 그 규모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정책은 신념과 가정을 토대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이 문제를 실질적인 해결하기 어렵고, 보다 좋은 정책으로의 발전도 기대되지 않는다.

지원주택과 주거지원서비스를 확보해야 한다. 그것은 자립생활이 어렵다고 여겨져왔던 이들에게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증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 쇠약해지고 있는 노인,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사람, 만성적 노숙인, 자립생활의 경험이 없고 주거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다양한 집단 등이 지원주택을 통해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주거지원서비스 역시 일반주택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20 13:40~14:00

칙 쿨 와이 Chick, Kui Wai 홍콩 커뮤니티조직 ／커뮤니티 조직가

홍콩의 거주문제에 대한 대응

배경 : 정부의 비적극적인 대비책

홍콩은 매우 작지만 정부가 7천억 재정자원을 갖추고 있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번화한 곳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빈부격차가 심각하여 사회양극화 현상이 뚜렷한 곳이기도 하다.

홍콩시민이라면 누구나 안정된 거주지를 원하지만 수백만원(HD)가격의 주택 평수가 고작 12평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높다. 홍콩의 반 이상의 인구는 민영주택에서 살지만 일반 서민은 점점 더 집을 소유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2003년 자가재건축계획이 마무리되면서(올해부터 다시 재건축 시작함) 홍콩정부는 서민에게 매년 15,000가구 임대공공주택을 공급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자유시장에서 해결하도록 방치하고 있다.

홍콩의 부동산 시장은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중산층 이상 소득자는 개인민영주택을 구매하고, 중층이상은 자주주택(資助房屋)을 선택하며, 서민은 공공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자주주택방식이 중단되면서 민영주택의 수요가 커지고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게 되어 서민들의 부담만 가중되었다.

서민의 주거문제 : 칸막이방(不適切居所)

이상 홍콩의 최근 주요 주거상황은 전체적인 홍콩의 주거상황이 악화되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정부의 주택정책 실책으로 인해 중간계층의 주택공급이 줄어들면서 부동산 가격이 극에 달하고 있다.본 회는 민간조직으로서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대변해오고 있으며 그중 칸막이방(不適切居所)의 상황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약 10만 이상의 홍콩시민이 不適切居所에 살고 있으며 칸막이방(板間房), 옥탑방, 침대방(床位), 롱우(籠屋) 등이 이에 속한다. 거주환경은 매우 협소하며 20가구가 공용 주방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고 1인당 면적이 20평방피트(0.6평정도)의 공간에서 생활한다. 번화한 홍콩에 비해 시민은 척박한 환경에 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 외에도 싼 임대료를 찾아 공업용 건문에 칸막이방을 만들어 생활하는 방식도 있으며 약 2만명의 거주자가 생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홍콩정부가 이같은 심각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와 정부의 복지정책과 주택정책에 따라 홍콩의 주거문제가 어떤 영향을 가져오는지 먼저 알아야한다.

공공주택 : 공급과 수요

현재 공공주택은 대기숫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7년 약 107,000개 사례에서 2011년 약 152,000개로 늘어났고 2012년 제 3분기까지 210,400종 신청안이 접수되어 5 년전에 비해 약 두배에 가까운 증가를 보인다. 약 40만명의 대기자가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2007년에 1.8년의 대기시간에서 현재는 2.7년으로 증가하였으며 그 중 만오천명은 3년 이상 대기자로 노인과 장애인을 뺀 숫자이다. 정부는 2007년부터 매 5년마다 75,000가구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계획이며 2018년부터는 매년 2만가구를 건설할 계획이다. 그러나 서민들은 대기시간까지 계속 칸막이방에서 생활해야하는 상황이다.

싱글족의 수요 : 저평가

실제적으로 2012년 21만개 공공주택 신청안 중 10만개가 18세에서 59세의 단신 싱글족이며, 전년에 비해 약 2만명이 증가했다. 특히 약 56,500명이 30세 이하로 청년의 낙관적이지 않은 미래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증가하는 청년주택 부족에 비해 비장년층에게 2천개 정도의 공급여유만 가지고 있어, 공공주택 대기시간이 수년에서 10년의 기간으로 이 긴 시간을 칸막이방

등에서 생활해야하는 고충이 있다. 따라서 공공주택 배분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임대관리 : 임대시장의 가중부담

이상으로 보면, 홍콩정부의 주택정책은 임대시장에서 임대인에 의한 보장은 점점 줄어가고 있고 서민의 거주상황은 더욱 악화되어가고 있다. 1998년 법 개정으로 인해 임대료관리제도 및 2004년 임대권리가 봉쇄되어 업주나 소유주의 임대를 증가하거나 변경을 가능하게 했다.임대권리도 기존 3개월 이상 월세를 밀리면 이사를 요구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1개월 여유를 주고 이사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저소득층은 이사비용 등 경제적인 어려움과 함께 계속되는 이사압력에 시달릴 수 있다.

공공주택 이외의 가능성 : 공업용 건물의 이용, 기숙사 건설

공공주택 건설 시 지구계획에 오랜시간이 걸리므로 단기적인 주택수요를 대응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서민계층을 위한 주택수요를 공공주택 외의 방법도 마련하자는 발언들이 있다. 그 중 하나는 토지이용을 변경하여 공업용 건물을 대기주택으로 이용하자는 방안이다. 우선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고, 칸막이방보다는 면적이 크고 이사압박을 덜 받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공업용 건물을 주거용도로 변경하면 일반 주거시설에 필요한 공용시설의 부족과 학교 등의 고려가 있어야한다. 또한 싱글족을 위하여 기숙사 건축도 고려해야한다. 홍콩에는 단지 580개의 비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기숙사가 있으며 비교적 환경이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청장년 싱글족의 평균 대기시간이 길어 사실적으로 근본적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하는데는 부족하며 2017년에야 수백개의 기숙사 공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연령제한으로 인해 30세 이상의 단신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할때 도움이 될 뿐이여서 공급상의 해결은 할 수 없다. 또한 장기적으로 볼때 한 서민가정의 주거안정이 공공임대주택밖에 고려할 수 없으며 대기시간은 큰 부담을 주고 있다. 홍콩의 거주문제를 전체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정책을 세워야 한다.

복지제도 : 보조금과 칸막이방

정부의 주거정책 및 임대관리제도와 복지제도는 홍콩의 주택상황에 많은 영향을 끼쳐오고 있다. 홍콩의 사회보장제도 중 사회보장원조계획이라는 제도는 보조금 방안으로 임대료를 낼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사회안전망으로 이용된다. 사회보장원조계획은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임대료 보조금으로 1인당 1990원의 표준금액에 최대 1335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으며 총 $3,325(2013년 2월, 표준금액 $2,070에 보조금 $1,440원 합계 $3,510)을 받을 수 있다. 임대료는 보통 보조금액을 넘는 수준이며 전기세 수도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또한 임대상황을 고려해야하며 선지불형식의 임대료 지불방식등 임대자 입장에서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야한다.

결론 : 정부의 적극적인 대비책

지금까지 어떻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약 10만 홍콩주민이 칸막이방에서 살수밖에 없는 상황인가를 기술하였다. 홍콩의 경제상황은 안정적이지만 이론적으로 이해할 수없는 홍콩주민들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정부의 '작은정부, 큰시장'을 지향하는 정책 하에 홍콩의 주택시장은 중심을 잃고 부동산가격의 상승을 초래했다. 다른 한 편으로 임대료, 식료품, 교통비 상승이 덩달아 일어났고, 시민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었다. 많은 서민들은 생활의 압박으로 인해 칸막이방과 같은 환경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 그들의 희망은 안정된 공공임대주택에 어서 빨리 배정되기를 기다리며 불편한 환경을 인내하고 있다. 홍콩정부가 주택정책에 대해 변화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고 자주주택의 재공급과 민영주탁을 늘려나가 근본적인 홍콩의 주택문제에 대응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20 14:00~14:20

타이완 근대사회주택정책의 발전과 문제

강상수 사회주택추진연맹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여 빈부격차가 더해지는 가운데 타이완정부는 2010년 새 공공주택 정책을 발표하였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이 정책은 타이페이시 도심부에 사회주택을 계획, 설계, 시공에 들어가게 된다. 본 문은 타이완의 소량 공급되는 사회주택과 기존 공공주택정책에 대한 정책적인 문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1. 타이완의 공공주택정책의 발전

타이완은 2차 세계대전 후 빠른 공업화와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정부의 주축이 된 주택정책은 자가주택 마련이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공공주택도 분양형 위주로 공급되었다. 그 후 공공주택정책은 재해 재활을 위한 중건주택, 정건주택, 군인촌, 국민주택등이 시기별로 출현하였고, 2000 년대 이후부터는 다양한 대출보조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최근에는 합이주택 「合宜住宅」 방식도 보급되기 시작하였으며, 각각의 사회주택의 특징은 (1)분양위주로 임대정책이 무시된 점과 (2)국가기관 종사자(군인, 공무원)를 대상으로 한 분양특혜로서 특정계층에게 제공된 점을 공통으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주택의 매매방식위주의 공공주택정책 체계는 약세 거주계층과는 거리가 멀었다.

타이완의 공공임대주택정책은 지속적으로 극히 일부분에 머물렀으며 현존 공공임대주택의 보급량은 0.08%에 지나지 않으며 대다수가 타이페이시에 밀집되어 있다. 그 중 핑자이라고 불리는 평가주택(平價住宅)은 1960 년~1970 년 사이에 지어진 저소득가구를 위한 임대주택제도로 4 곳에 총 1,448 가구가 지어졌다. 또한 1975 년 국민주택조례 공포에 따라 소득 20 분위이하의 저소득층이 입주할 수 있는 임대식 국민주택(出租國宅)이 타이페이시 23 곳 3,833 가구가 지어졌으나 분양국민주택의 1%에 달하는 양이었다(표 1. 타이페이시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및 기본특징 참조).

2010 년부터 민간단체의 지속적인 요구에 새로운 형식의 공공임대주택정책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현임 마영구대통령의 선거공약으로서 타이페이시와 신베이시 5 곳에 중앙정부가 토지를 제공하여 사회주택을 건설하는 것으로 입법원에 주택법을 통과시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기존의 국민주택 보급방식인 합이주택도 처음 주택을 구매하는 자에게 공급하고 있다.

타이페이 시정부는 '공영주택' 방식으로 중앙정부나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사회주택' 과는 다른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을 시장 임기내 4,808 가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시정부는 현재 저소득가구에게 제공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인 안캉핑자이(安康平價住宅; 완공 후 3,300 가구) 를 정건하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타이페이 시외의 수도권인 신베이시는 정해진 사회주택정책이 없이 중앙정부의 주택정책을 수동적으로 집행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고, 현재 경찰 숙소와 11 곳의 소규모의 임대주택만을 계획 중에 있다.

2. 현행 사회주택 정책의 근본 문제

(1) 지도자의 무심, 추진 목표 및 마스터 플랜의 부족

사회주택은 타이완사회에 형성된 주요한 의제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장기적인 안목의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대통령선거에서 야당의 정당후보가 10%의 사회주택을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현 집권당에서는 선거 기간동안 5 곳의 사회주택 1,661 가구의 목표만을 제시하였다. 이 같은 현상을 한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역임대통령들은 여야를 불문하고 임기 내 백만호 공공주택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타이완의 집권당조차 5 곳의 소량 사회주택의 건설과 임대료 보조 또는 국토계획의 변경 등 방식으로 소극적인 주택문제의 해결만을 제시하고 있다. 동시에 내정부가 진행하는 조직개편은 원래 주택부문의 인력을 세곳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어 주택부문의 역량을 강화하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다.[1] 이러한 중앙행정체계의 운영방식은 사회주택 추진에 있어 무심함을 드러내고 있다.

(2) 주택법의 도구 형식

---

[1] 린이호우(林益厚) (2012) 주택법 및 사회주택宅, 「도시갱신자료집」, 53: 8。

타이완의 최초 주택법은 2012 년말 시행되었으나 법규의 성질은 실질적으로 기능이 완전하지 않다. 54 조 조문항 중 사회주택의 내용은 19 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귀납적인 로직으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책임을 엮임하고 지방정부는 민간, 즉 건설회사의 협조 하에 사회주택을 건설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역할이 부족하며 민간 비영리단체의 협조로 건설한다는 제도성 성격도 없다. 따라서 사회주택의 진행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3) 사회주택의 지원대상 왜곡

중앙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에도 지방정부인 타이페이 시정부는 단기적으로 적극적으로 가능한 자원을 이용하여 사회주택을 공급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대상은 구직능력이 있는 중등 소득가구 위주로 사회약세계층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정부부문에서 빈곤가정과 약세가구를 공공주택에 포함할 경우 치안, 관리, 임대계약갱신 등 에서 많은 문제를 유발할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주변 마을주민의 반대를 이유로 약세계층의 수요를 회피하고 있다.

(4) 자금운용 및 토지취득방식

4,808 호의 목표를 위해 시정부는 앞으로 4 년동안 113.06 억 대만달러의 예산을 세웠다(약3.8 억 달러). 대부분의 경비는 타이페이시 「주택기금」으로 마련되며, 타이페이시 주택기금은 2013 년 279.5 억 대만달러가 산정되어 있다. 타이페이시의 공영주택은 지속적으로 1 만호를 넘어 주택기금의 압력이 큰 상태이다 그러나 현재 시정부는 중앙정부의 보조외에 다른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다른 문제는 타이페이 시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토지가 유한되어 있고 구 내의 유용한 공유토지는 중앙정부 소속 국영기업 소유의 공유토지로 되어있는 상황이다. 타이완 총통의 구체적인 사회주택정책 마스터플랜 없이는 기타부문의 사회주택에 유용가능한 공유토지들이 민간 건설업자들에 의해 운용될 수 있는 상황이다.

3. 결론: 0.08%에서 0.1%의 발전

올해부터 시작한 타이완의 사회주택은 다른 동아시아국가나 도시에 비하면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전체적인 사회주택량이 부족하고 제도의 장기적 운영도 불확실한 상태지만 많은 주택방안들이 제안되고 있으며, 정부, NPO, 건축사 또는 민간단체에서 운용가능한 방법을 찾고 있다. 장기적으로 타이완사회에 필요한 거주복지 형성에 대한 깊은 토론과 이해가 있어야 하며, 거주정책의 적극적인 전환이 진행되어야 한다.

표 1 타이페이시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및 수량

주택명칭	추진년대	수량	제공대상	임대료(관리비포함)	목표대상가구수
공영주택	2011-	184	소득 50 분위이하 ; 연령 20-45 세	9,240~23,850 원 면적 및 지역차 고려 시가 약 70%~80%	타이페이시가구수 : 1,017,063 호(2012/10) 소득 20 분위이하 : 203,412 호(2012/10) 저소득가구 : 20,608 호 (2012 년 10 월) 무주택저소득가구 : 12,095 호 (2011 년 3 월)
임대주택 出租國宅	1976-2003	3,833	소득 20 분위 이하 ; 부분적 특수소득인구	3,250~16,400 원 면적 및 지역차 고려 시가 약 50%	
핑자이 平價住宅	1970-1979	1,448	저소득가구 소득 1.5%분위이하	300 원관리비	
기타임대 주택	-	825	특수대상, 부녀복지대상, 노인, 원주민주택갱신 등	대상별 차이 있음	
합계	6,290 호				

자료 : 내정부 통계, 2012 년 10 월 ; 내정부 통계처 (2011) 사회주택수요조사보고서 ; 타이페이시 시회주택추진계획 (2013 년-2016 년) (초안) ; 임대주택자료네트워

20 14:40~15:10

	소개할 <사업,운동,조사,연구>의 프로필
발표자1 영어표기 소속,간략한 경력	竹中 伸五 Shingo Takenaka 주식회사나이스 지역개발사업부 1987년 와세다대학이공학부건축학과 졸
발표자2 영어표기 소속,간략한 경력	田岡 秀朋 Hidetomo Taoka 주식회사나이스 환경복지사업부 2001년 홋가이도대학 농학부 졸
임무, 업무, 연구, 조사의 내용, 간단한 연혁	●NICE (Nishinari Inner City Enterprises) 마을만들기 일환의 하우징 2002년 10월 마스미장재건축사업 마스이 맨션M 완성 【기획】 2006년 3월 브랑 코-토B 완성 【기획・사업주】 2009년 11월 커뮤니티하우스 하기H완성 【기획・사업주】 2011년 3월 아이비스 코-토I 완성 【기획】 2012년 3월 아지루 코-토A 완성 【기획・사업주】
대상지역,대상자, 이용자	●나이스의 5가지 실천 ・M : 밀집시가지의 민간노후주택 재건축 모델 ～이제 다른데 가지 않아도 됩니다! ～ 종전 주거자와 월세 ・B : 니시나라의 디자이너 맨션 모델 ～젊은층이 선택하는 주택을～ 디자인과 생활스타일 ・H : 카마가와사키 단신고령자의 내일의 '삶' 모델 ～지원과 주거공간의 균형을～ 생활보호시장과 물적주택 수준 ・I : 고령기의 마을만들기 앤 아파트먼트 모델 ～고령자에게 인연과 역할의 연출을～ 머물 곳(연결)과 서포트 (복지) ・A : 니시나라의 도시형주택(사회주택)모델 ～일하기 시작하다. 살기 시작하다-는 니시나리에서～ 도시형임대주택과 급여
사업,운동,연구,조사의 사회적 사명	●니시나라의 도시적 과제 ・밀집시가지 : 방재성 향상 중점 지역 중 특히 우선적인 노력이 필요한 밀집 시가지에 위치한 / 최저주거수준 (4.5 조의 방과 부엌이 있는 18.0 ㎡ 이상의 연립 주택) 미만 주택 비율 22.6 % (전체 주택 호수 의 1 / 5) (전국 평균 4.2 %의 5.4 배, 오사카 평균 9.9 %의 2.3 배) · 심각한 고령화 : 고령화율 32.7 % (전국 평균 22.1 %의 1.5 배) / 단신고령자 가구 비율 26.7 % (전국 평균 7.9 %의 3.4 배) · 빈곤 · 고립: 5 명 중 1 명이 생활보호수급 / 반수 이상의 아동이 취학 원조를 이용 / 빈곤 비즈니스 문제 / 자살률 0.93 % (전국 평균 0.24 %의 4 배) / 낮은 자존감
사업, 운동, 연구, 조사의 사명, 법적/재정적 근거	*●마을이 경험한「주거지 만들기」* *・「주거지 만들기」의 변천 : 동화지구의 특정목적의 공영주택, 올 클리어런스형 개량사업 → 공영주택의 능력에 따른 임대료 적용 제도, 마을 만들기 협의회 제도, 노후 주택 재건축 지원 사업, 정기적 차지권 대해서 코포라티브 주택(협동조합주택), 공영 주택의 생활원조원 (LSA) 제도, 고령자주거안정화법 및 등록 주택에서.* *●민관협동의 새로운 방법으로「주거지 만들기」* · 오사카 민간 노후 주택 재건축 지원 사업 (M, B, A) : 전문가 (하우징 어드바이저) 파견 / 재건축 건설 비용 보조 제도 / 종전 주거자 임대료 보조 제도 / 임대 주택 건설 자금 융자 제도 ・국토교통성 고령자 주거 안정화 모델 사업(I) : 주택 및 고령자의 교류시설등의 정비비, 설계비 보조
실제 운영, 경영, 조사방법 등	*●나이스의 5가지의 건* (별첨 : 엑셀표)

과제, 요망, 제안 등 정책적 제언	●미래를 대비 한 "주거지 만들기" · 생활 보호와 주거수준 물적 주거상태를 묻지 않는 "생활보호 환영 시장" → 미래의 싱글용 주택 재고 수요를 예측 한 고품질 주택을. · 주택정책의 재구축 잠재적인 불안정 주거층의 증가 (비정규직 세대의 고령화, 독신의 대량화) → 생활보호, 주택시책의 검토 (주택부조 단일 공급, 자가에서 사회투자의 주택 시책 등) ● 선택할 수 있는 "주거지 만들기" · 주택 공급과 주택 서비스 개호서비스 등과 주거 제공 일체형 사업의 증가 → 일체형뿐만 아니라 분리형 사업 추진을. → 개호보험 외의 가사서비스, 있을 곳, 동료 등의 숨은 니드와 비용 사회 주택으로 임대주택 종신고용모델이 없어지고 있는 미래와 주택의 모습 → 불안정 취업을 특별취급하지 않는 도시의 일 만들기와 근로자 주택의 연동 → 도시주택의 미래 수요 (한부모 가구의 증가, 해외 노동자 수용 등)
본 발표에서 특별히 소개하는 이슈에 대해	●민간 회사로의 사업성과 사회성 · 마을과의 대화로 전략을. "생활보호 환영 시장"과 "빈집사업"도 경제적 동기(사업)의 니시나리의 임대주택시장의 한 측면이라는 사실. 마을에 살고·생활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와 사회 변화에서 생기는 요구(want)에, 사회성이라는 시즈(아이디어)를 어떻게 구체화 할 것인가?

20 15:10～15:30

지역재생을 촉진하는 사회체험형 에스닉뮤지엄 구상의 실현을 위한 액션 리서치

전홍규, 카와모토아야, 나카니시유지、이와야마하루오、다문화커뮤니티워크연구회

들어가며

新오사카 시정하에서 니시나리특구 구상이 입안되어 해당 지역에 장기간 거주해 온 주민, 그리고 민간단체간에는 기대와 불안의 양가감정이 떠돌고 있다. 니시나리구는 면적 7.35 ㎢에 인구 약 13 만 정도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외국인(5.6%)과 재일교포(자이니치코리안, 76.5%)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특히 북서부지역을 중심으로 최근에는 신규 외국인도 증가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는 1920 년대부터 거주하기 시작한 오키나와로부터의 이주자에 의한 커뮤니티도 형성되어 있어 문자 그대로 다문화지역으로서의 특색을 농도짙게 보이고 있다. 또한 북서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대규모 동화지구(同和地区)에서는 밀집시가지가 널리 분포하고 있어 주택을 포함한 지역기반시설의 노후화가 심대하다. 한편 일본 최대의 일용노동자의 생활과 거주의 장(요세바, 寄せ場)인 아이린 지구(통칭 카마가사키(釜ヶ崎)가 북동부에 입지하는 이유로 인해 피보호율(187.0‰)이 전국(12.5‰), 그리고 오사카시 전역(46.3‰)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지역의 사회경제적인 지반 침하가 심화하고 있다. 지역 시설의 열악화와 사회관계자본의 취약화에 대한 우려로부터 행정시책의 전개도 절실하게 요망되어 왔다. 한편 아이린지구에서는 최근 10 년간 지역주민과 민간지원단체간의 연계에 근거한 '카마가사키마을재생포럼'을 중심으로 지역에 산재하는 사회적 자원을 활용한 마을만들기 활동이 진행되어 왔다. 또한 북서부에 입지하는 동화지구와 재일교포 거주지구에서도 지역재생을 위한 자주적이자 창발적인 실천이 전개되고 있다. 대학과의 연계와 관련해서는 배낭여행족을 대상으로 한 관광산업 추진 지원, 오사카시립대학 도시연구플라자를 거점으로 한 시민 마을만들기에 대한 지원, 아트를 통한 지역매니지먼트의 대응(NPO 법인 목소리와 말과 마음의 방, 코코룸)등 오사카의 심연을 긍정적으로 수렴, 재해석, 그리고 재조명해 감을 통해 지역재생을 꾀해가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대응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감을 통해 마이너스적인 측면으로만 인식해 온 위와 같은 지역의 사회적・역사적・산업적・문화적 자원에 대해 사회적인 가치를 발굴하여 지역재생과 니시나리특구 구상과도 연계해 가기 위한 액션플랜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무엇보다도 시의적절한 연구라는 점에 특징이 있고, 본 연구의 결과를 현지에 실천적으로 환원해 갈 수 있는 액션 리서치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구상을 실현해 가기 위해 토요타재단을 비롯하여 다양한 민간 조성금에도 응모하고 있다. 현재 공익재단법인 유니벨재단에 의한 2012 년도 연구조성, 문부과학성과학연구비' 도전적인 맹아연구'(2012 년도～2014 년도, 「다문화 커뮤니티워크의 모델구축에 관한 연구」), 그리고 공익사단법인 일본도시계획학회로부터 2012 년도 사회연계교류조직 지정을 받아 조성금을 받고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전부, 연구대표자는 전홍규).

지역경제의 재건과 지역문화의 재확인을 향한 뮤지엄 어프로치

건물 안에 고정된 박물관 및 전시공간이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지역산업을 있는 그대로 감상할 수있는 시설로서 유럽에서는 야외박물관(open air museum, 영국), 혹은「에코뮤지엄」(프랑스, 스웨덴 등, 프랑스에서는 에코뮤제라고 칭함)이라는 어프로치가 있다. 이는 1960 년대 이후 농촌지역으로부터 비롯하여 1980 년대에는 도시지역으로 확대해 간 것이지만 단순한 전시공간이 아니라 쇠퇴한 지역경제의 재생을 향한 새로운 지역재생프로그램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지역 커뮤니티와 주민들이 각각의 자원 소개의 강사(instructor)가 되어 지역내에 산재하는 다양한 역사 및 산업유산을 위성화하여 이들을 네트워크화해 가는 지역 전체 뮤지엄 구상은 새로운 지역관광산업의 창출을 통한 지역재생과 신산업의 창생과도 연결되는 아이디어이다. 현재 세계적인 현황과 관련해서는 여러가지 설이 있지만, 굳이 에코뮤니엄이라 칭하지 않더라도 이와 유사한 이념을 실천하는 조직은 약 90 여개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大原 1999 : 40 에서

재인용). 大原(1999・2001)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구성 요소를 균형있게 구비하고 있는 상태가 에코뮤지엄의 이상적인 형태라고 지적하고 있다.

①H(heritage) : 지역의 자연・문화・산업유산 등을 현지에서 보전하는 것

②P(participation) : 주민참가에 의한 관리 운영, ③M(museum) : 박물관과 관련한 일련의 활동

일본 국내에서도 1995 년부터 '일본에코뮤지엄연구회'가 설립되어 일본 각지에서 전개하는 에코뮤지엄의 발전을 위한 정보교류와 새로운 지역자원의 발굴을 위한 연구와 실천활동의 교류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는 자연・환경・산업유산을 중심으로 한 대응이 주되게 전개되어 본 연구 및 구상에서 다루고 있는 사회적 자원(노동・에스니시티・인권・복지)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도시 오사카 안에서 다양한 형태로 곤란을 경험하고 있으며, 지역재생의 과제에 대해서는 지역환경과 사회환경적으로도 관민의 영역을 넘은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니시나리지역, 그 중에서도 북서・북동부를 중심으로 기존의 사회자원을 발굴하여 양의 유산으로서 재해석해가는 작업을 전개한다. 또한 이를 추진해가는 인재풀로서의 지역재생에 대응하는 지역주체의 에이전트의 양성도 요구된다. 본 구상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역재생을 목적으로 하여 마이너스적인 의미로만 인식되어온 지역 자원에 대해 양(陽)의 측면을 재조명하여 새로운 자원으로서 재해석하여 지역재생의 자원으로서 동원한다.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지역 전체 뮤지엄을 기능하게 하여 인적 순환에서 경제적 순환을 창출하여 활력 있는 Deep South 의 영광을 회복해 가는 지역재생의 액션 플랜을 모색하기 위해 뮤지엄을 구성하는 각 위성(연구영역의 대상범위 및 테마)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 연구 및 자원수집을 추진하고 있다.

이하는 본 구상의 축이 되는 위성군으로서 상정하고 있는 대상과 개요를 소개한 것이다.

【니시나리 북서부 에스닉 자원을 활용한 뮤지엄 위성 구상】

①재일교포(자이니치 코리안)의 에스닉 산업 : 나사・피혁 : 1920 년대부터 조선반도로부터의 이주자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는 니시나리에서는 재일교포가 종사하는 직업이 볼트・낫트 등과 같은 금속 가공업과 피혁업에 집중해 갔다. 전자는 경상도 출신자가 많으며, 후자는 전라도 출신자가 다수 종사하고 있었다고 하여 거주지도 출신지에 따라 일정 정도 구분되어 있었던 것 같다.

②오키나와(沖縄)로부터의 이주자 : 1920 년부터 출이민(出移民)이 늘어、오사카에서도 1935 년 현재타이쇼구(大正区)와 키타구(北区) 등에 집주가 확인되고 있다. 니시나리에서는 일본방적 츠모리공장에 1927 년 시점에서 오키나와 출신의 노동자를 확인할 수 있다. 동향자(同郷者)집단의 네트워크도 확대되어 1924 년에는 칸사이 오키나와켄진카이(関西沖縄県人会)가 발족한다. 그 산하에 니시나리 오키나와켄진카이가 설립되어 1964 년에는 동향자의 기부에 의해 '오사카니시나리켄진회관'이 건설되었다.

③민족교육 ・ 다문화교육(오사카시립 나가하시초등학교) : 한신(阪神)교육투쟁 이후의 각서에 따라 오사카에서는 최초로 설치된 민족학급이다.

다문화공생학급 : 7 개국 및 지역(필리핀, 인도네시아, 네팔, 태국, 중국, 대만, 내몽골)＋일본・재일교포 자제가 다니고 있다. 다문화공생월간 행사(월 1 회), 필리핀학급(10 년째)

④에스니시티와 종교 : 재일대한기독교회니시나리교회 : 1920 년대에 니시나리에 이주해 온 재일조선인 가족이 가정예배를 드리던 것이 효시이다. 그 후 이마미야교회, 오사카니시나리 교회의 형태로 이름을 변경해 가는 가운데 규모를 확대하여 지역의 자이니치 코리안 신자의 정신적인 의지처가 되어 왔다. 최근에는 결혼이주자 등 신(新)이민 신자도 늘고 있다.

⑤콘고카쿠인(金剛学院)의 적지(跡地) : 종전 후 니시나리 거주 자이니치 코리안이 자녀의 민족교육을 위해 개설한 학교이다. 설립 당초는 니시나리구내에 있었지만 2007 년에 스미노에구(住之江区)로 이전하였다. 현재는 초중고교가 운영중에 있다. 학교장은 한국으로부터 파견되고 있다.

21 13:10～13:40

	사업, 활동 소개
발표자1 영어표기 소속, 간략한 경력	益子千枝 Mashiko, Chie、 오사카 지역생활정착지원센터와 요리소이 넷 오사카의 상담원을 겸임. 구호시설직원이며 노숙생활자순회상담 상담원 등으로 활동함.
발표자2 영어표기 소속, 간략한 경력	平川隆啓 Hirakawa, Takaaki 요리소이 넷 오사카 상담원, 지역・어시스트 연구 사무소 직원, 오사카시립대학 도시연구프라자 연구원 경력 있음.
입무, 업무내용 간략한 연혁	오사카부 지역생활정착지원센터와 요리소이 넷 오사카에서는, 교정시설의 전과자 등을 코디네이터한다. 요리소이 넷은 2009 년 4 월부터, 정착지원센터는 2010 년 7 월부터 활동함.
대상지역, 대상자 이용자	센터에서 다룬 지금까지의 사례는 약 400 케이스에 달하며, 전국의 다른 정착지원센터에 비해 월등히 많다.
사업의 사회적 사명	교정시설이 처해 있는 상황으로서, 고령자의 증가/ IQ 70 이하의 사람이 약 20 % 정도라고 하는 복지적인 과제가 있다. 또한 복지현장에서는, 알아차리기 어려운 경도의 장애가 초래하는 삶의 어려움이나, 형무소에 가길 바라는 사람도 있는 등 사회측면의 문제도 있다. 이러한 배경이 있기도 해, 전과자 지원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장애인 지원, 홈리스 지원, 인권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지원이 시도되어왔다. 오사카에서는 전과자 지원의 민간 네트워크로서 요리소이 넷 오사카를 전개하고있다. 요리소이(동행) 넷 오사카는 ● 다양한 지원단체와 연계 2009 년 4 월부터 홈리스 지원 및 취업 지원, 인권문제 등에 개입/지원해 온 단체들에 의해 "요리소이 넷 오사카"를 결성. ● 각종 사업을 전개 요리소이 넷 오사카의 다양한 분야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활용, 전과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코디네이트. ① 상담사업 ... 전과자와 관련된 다양한 상담에 대응 ② 조사사업 ... 전과자에 관한 실태조사 ③ 계발·연수 사업 ... 연수회 및 심포지엄 등 개최 오사카부 지역생활정착지원센터(大阪府地域生活定着支援センター) ■ 교육부 · 법무부의 전과자 지원 후생노동성·법무부에 의한 전과자의 출소 후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 2010 년 7 월부터 오사카의 위탁을 받아 오사카부종합복지협회(사회복지법인)가 오사카부 지역생활정착지원센터를 오픈. ■ 전국의 센터와 연계 전국에 전개하고 있는 지역생활정착지원센터와의 연계를 도모하고, 본인에게 적합한 지역에서의 지원을 실시. ■ 교정시설과 협력하여 지원 형무소와 보호관찰소 등과 보다 밀접한 연계를 통해, 출소 전부터 사전 조정을 실시. 출소 후 에프터 케어도 실시.
사업의 사명 및 법적, 재정적 근거	지역생활정착지원센터는 후생노동성·법무부에 의해 전과자의 출소 후 생활 지원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각 도도부현에 설치되어있다. 오사카에서는

	오사카부가 위탁을 받아 오사카부종합복지협회(사회복지법인)가 운영하고 있다. 한편 요리소이 넷 오사카는 임의 단체로, 사업은 민간 조성금 및 회비에 의존하고 있다.
실제 운영, 경영 등	정착지원센터는 현재, 유급 직원 4명 체제로 운영. 요리소이 넷은 뜻있는 사람들에 의해 사무국 팀에서 운영하고 있음.
과제, 요망, 제안 정책적 제언 등	오사카의 경우 도시에 빈곤 지역이 집중하고 있고, 전과자들도 모이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는 등 도시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또한 사회자원의 연계와 심리 판정 등의 전문성 문제 등 복지 제공자 측의 문제도 있다. 이와 같은 지역성의 격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착 사업은 전국에 일률적으로 설계되어 결함도 발생하고 있다.
본 발표에서 특히 소개하고 있는 이슈에 대해	오사카에서의 정착지원센터와 요리소이 넷에 의한 전과자 지원의 흐름을 소개한다. 그 과정 속에 나타난 과제와 지원 방안 등을 보고한다.

<PPT 설명>

1p. 오사카의 출소자 지원

2p. 지역생활정착지원센터의 업무는 교정시설 출소 후 복지적인 지원으로 ①코디네이트 ②follow-up ③상담지원이 있다.

3p. 지역생활정착지원센터 ①코디네이트 업무는 교정시설·보호관찰소와 연계하여 출소 후 지원을 어세스먼트하기 위한 것이다.

4p. 교정시설을 출소하면 지원자(서포터)가 동행하면서 복지제도의 신청이나 사전에 확보 한 주거 안내, 앞으로의 생활에 대한 조언 등을 격일로 실시한다.

5p. 이후에도 follow-up 하면서 수시로 지원하지만 중독이나 인간 관계 문제 등으로 지역 생활에 다시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다.

6p. 교정시설·보호관찰소에서 의뢰가 오는 특별조정 외에 지역 및 가족, 장애인, 홈리스, 의료 등의 지원관계자 등으로의 상담도 출소자 지원에 있어서는 중요하다.

7p. 오사카에서는 이러한 상담 지원을 지역생활정착지원센터 요리소이 넷 오사카를 중심으로 지역 및 지원자, 가족, 그리고 본인과 협동하면서 지원해 나간다.

8p. 지원자가 관리하고 질책하는 등 상하 관계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본인에게는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9 p. 수평관계에서 출소자의 관점에 동행하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21 14:20～14:50

홈리스・주거빈곤층의 복합적인 주거지원

NPO 법인 대동네트워크 사업단
이사장　코바야시 마코또

■법인개요

법인으로 2002 년에 설립. 제 2 종 사회복지시설의 무료저렴숙소를 오사카 6 개, 히가시오사카 1 곳과 효고현, 고베시에 1 개소, 니시노미야시 2 개소, 아마가사키시에 1 개소 운영. 11 개 시설, 정원 370 실. 쉘터도 병설.

행정에 신고를 하고, 매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도점검을 받고 운영하고 있는중간시설.

■어떤 사람이 이용하고 있는가?

의지할 곳 없는 고령자, 생활곤궁자, 연금생활자, 신체장애인 (1 급 포함) · 지적장애인 · 정신장애인, 민생위원·지역 자치회, 경찰, 보호관찰소, 병원, 다른 시설 등으로부터 의뢰된 사람(긴급 입원 및 응급보호 등 24 시간 체제) 등이 있습니다. (청년층 10%, 노인 20%, 장기입주자 26%, 전과자 5%, 장애인 2%, 여성 0%,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자 46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참조).

그리고 이용자가 자립 생활이 가능하도록 개별 사례에 맞는 컨퍼런스를 실시하며, 지원 내용도 케이스에 맞는 다양한 방법으로, 타 단체와 협력 · 연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

■어떤 단체 등과 서로 협력 · 연계**하고** 있는가**?**

효고현 주최의 노숙자 관계 협의회, 오사카부, 효고현의 전과자 지원 네트워크, 홈리스 지원 전국 네트워크. 후생성의 '주택생활전환지원사업' 을 실시.

노숙자를 대상으로 2011 년에는 104 회 주먹밥을 만들어 무료배식하는 아웃리치를 실시했습니다. 오두막, 텐트거주자, 골판지만 가지고 노숙하고 있는 사람들을 새벽에 개별 방문하여 안부확인, 건강상태와 상담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이런 활동은 시설이 만실상태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웃리치 활동은 법인 활동의 근간이며, 우리도 현장의 공기를 마시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시설운영 만이 지원이 아니라, 지원의 입구와 출구를 함께 생각하고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홈리스(가족이나 친구와 단절된), 하우스리스(집이 없는) 등의 중/고령자 이용 시설의 일종인 무료저렴숙소에서는 어떤 지원이 되고 있는가?

거실은 각각의 프라이버시을 보장하는 독실이나, 식당·목욕탕·휴게실·화장실 등은 입주자의 생활 상황에 맞춰 공동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하와 같습니다.

① 프라이버시가 확보된 편히 쉴 수 있는 개인실(약 7.4 ㎡)에서 생활하며, 각각의 목표와 목적을 위해 생활상황을 체크함. 일상생활용품 지급.

② 고령자가 많기 때문에 공동 목욕탕에서 혼자서 목욕하거나, 공동 화장실 사용중의 사고 방지.

③ 식당에서 규칙적이고 건강한 식사 지원.

취업자 등 시설에서 식사가 어려운 분들은 상황에 맞춰 대응함.

④ 상담이 가능한, 건강한 사람과의 공조.

⑤ 입 퇴원 의사와 치료 계획의 협력 및 통원 동행 지원, 복약 관리.

⑥ 개별 취업 활동에서의 상담, 취업알선센터(할로 워크) 동행 및 구직 활동 지원, 취업 대상 기업과의 연락 조정.

⑦ 취업 중인 사람의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취업 의욕이 고취되는 시너지 효과, 약 20 %의 사람이 취업해서 자립 생활함.

⑧ 금전 관리 및 대출.

⑨ 결핵 검진, 독감 예방 접종.

⑩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 검사.
⑪ 호적, 주민등록관련 문제해결, 실종사건 등 회복 처리, 장애인 수첩 교부 및 갱신, 자립 이사 절차 지원, 채무 처리.
⑫ 화재 예방, 피난시설로 제공, 지역 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응급 스테이션"기능.
⑬ 공유지 내 오두막이나 텐트 거주자의 퇴거를 지원.
⑭ 지역자치회와 초등학교와의 연계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
⑮ 많은 이용자가 아파트 등으로 이사함. 이에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실시, 입원중 지원 및 간병지원. 최대한의 지속적인 연계 유지.
⑯ 고령·장애로 도우미·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있음. 운영하고 있는 숙소는 어디까지나 중간 시설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불안을 안고 있거나, 입퇴원시와 같이 일시적인 체력 저하, 개호보험에서 경도의 요개호자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지원하우스를 개설함. 입주시에 보증인이 필요없으며, 일시금도 받지 않고 운영

중간시설 일람 (생활지원하우스 이외는 무료저렴숙박소)

오사카시 1	콘크리트 4 층、콘크리트 3 층、70 실 8 조、6.4 만~8.8 만엔 취업 25%정도	히가시 오사카 1	콘크리트 2 층, 콘크리트 3 층, 17 실 7 조、6.4 만~8.8 만엔 고령·단기이용자가 많아 취업률은 10%정도
오사카시 2	콘크리트 4 층、28 실 4.5 조、6.4 만~8.8 만엔 취업 20%정도	코베시 1	콘크리트 4 층、콘크리트 3 층、68 실 4.5 조、6.4 만~8.8 만엔 취업 20%정도
오사카시 3	목조 2 층, 12 실 6 조、6.4 만~8.8 만엔 취업 20%정도	니시노미야시 1	콘크리트 4 층, 35 실 6 조 6.4 만~8.8 만엔 취업 20%가량
오사카시 4	목조 2 층, 13 실 4.5 조、6.4 만~8.8 만엔 고령환자가 많아 취업은 10%정도임	니시노미야시 2	목조 2 층、21 실 6 조、6.4 만~8.8 만엔 고령환자가 많아 취업은 10%정도임
오사카시 5	목조 2 층, 4 실 4.5 조、6.4 만~8.8 만엔 고령환자가 많아 취업은 10%정도임	아마가사키시 1	콘크리트 4 층, 91 실 4.5 조、6.4 만~8.8 만엔 취업 25%가량
오사카시 6	목조 2 층、13 실 4.5 조、6.4 만~8.8 만엔 고령환자가 많아 취업은 10%정도임	아마가사키시 생활지원하우스	콘크리트 8 층、55 실 6~9 조、10.6 만엔 개호경계라인 11 명, 요지원 1~2:2 명 개호 1:11 명、개호 2~3:0 명 개호 4:5 명, 개호 5:0 명

21 14:50～15:20

更宿連 (전국 갱생시설 · 숙소 제공 시설 · 연락 협의회) / 이행형지원시설(移行型支援施設)의 역할과 운영을 통해 보는 오늘날의 과제

更宿連 회장 및 갱생시설 오오요도료 사감. 오쿠무라 켄

1. 생활곤궁자 지원의 생활보호를 중심으로 한 시설

2013 년 1 월 현재, 생활보호법에 의거한 갱생시설 Rehabilitation Center (정의: 신체적 또는 정신상의 이유로 보호 및 생활지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수용하여 생활부조를 실시)은 전국에 18 개 /정원 1,692 명, 홈리스 자립지원법에 의한 자립지원센터가 24 개/ 정원 1,800 명, 숙소 제공 시설 9 개/ 정원 700 명에 更宿連에 가입한 (종래부터 있던) 무료저렴숙소가 7 개소가 존재한다.

갱생시설은 대도시, 특히 수도권, 나고야, 오사카/교토/고베에 집중되어 있으며, 전국 단위로 좀처럼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오히려 축소되는 경향도 있다. 홈리스 자립지원센터는 지방에서도 조금씩 시설이 생겨나고 있으며, 근거법인 홈리스 자립지원법도 5 년 연장되면서 2017 년까지 유효하게 되었다. 또한 새롭게 수도권을 중심으로 생겨나는 시설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NPO 가 운영하는 새로운 무료저렴숙박소사업이 생활보호 수급자를 커버하는 역할로 많은 사업을 전개 (수도권 만 200 개 시설 이상)하고 있다.

같은 생활보호법에 근거한 복지시설인 구호시설 Relief Center (정의: 심신의 결함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수용하여 생활부조를 제공)가 전국에 188 개, 정원 17,888 명이다. 이용단가는 예를 들어 동일사업의 갱생시설에 비해 같은 조건의 경우 일인당 약 2 배, 생활비를 제외한 사무비용 인건비 부분의 단가는 약 3 배 높다. 평균입소기간은 15 년으로 꽤 긴 편이지만, 시설의 운영은 꽤 윤택하게 되고 있는 편이다. 반면 갱생시설의 평균이용기간은 10 개월 정도이지만, 여유가 별로 없다. 공실이 적은 것도 있고, 경비면에서는 해당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아파트 생활을 하는 단신자가 받을 수 있는 생활보호비와 비슷한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갱생시설 운영의 비용적인 과제는 크다고 할 수 있다. 하물며, 더 낮은 단가설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민간 NPO 시설의 운영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2. 갱생시설의 이용 상황 · 실태에 대해

각 시설 이용자의 사회적 니드를 기초로 한 이용상황·실태에 관해 "전국갱생시설실태조사"(2012 년 4 월 1 일)을 기준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갱생시설 18 곳의 총 정원은 약 1,700 명으로 2012 년 4 월 1 일 현재 1,300 명이 입소하고 있으며, 이는 정원 대비 80 %수준이다. 그러나 연중 이용은 2011 년 1 년간 퇴소인원 (연이용인원) 1,890 명에, 내방하는 이용자는 정원을 매우 상회하고 있다. 시설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빈 방을 준비하고 언제든지 입소시킬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시설의 상담업무를 맡는 직원은 그 업무가 차지하는 부담이, 이용시작 및 퇴소시(권고 퇴소 및 무단 퇴소도 있다) 그리고 이용자의 입소 기간내의 응대에 있어서 요구되는 역량 등 큰 부담과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입소 시에는 다양한 기관과의 의뢰/조정에서 출발해, 이용자와는 정중한 응대나 어세스먼트를 필요로 하는 등 서로에게 긴장관계로 출발하게 된다. 또한 퇴소와 관련해서는 관련 행정기관과의 조정은 물론, 이용자 주체, 그 지역에서의 지속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이용자의 의견

조율이나 조정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설의 이용자는 현재 입소중인 이용자에 한정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퇴소 후 aftercare 를 18 시설 중 15 시설이 "생활보호시설 통소사업(生活保護施設通所事業)'으로 실시하고 있다. 시설 퇴소 후 통원·방문에 의한 생활지원은 물론이며, 또한 사업 외 대상에게도 aftercare를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장기 입소자는 거의 없고, 10년 이상의 이용자도 불과 4명이며, 3년 이상의 이용자도 전체의 60 %정도인 88 명에 정도이다.

2008 년 조사와 비교하면 평균 입소기간은 10.8 개월로 거의 같으며 (단 당시는 기간이 짧은 일시 이용시설이 지금보다 다수 존재했음), 평균 연령도 50 대 초반으로 크게 차이는 없다. 그러나 눈에 띄는 변화로는 젊은층의 증가라는 점이다. 40세 미만의 인원이 114 명에서 190 명으로 증가하고, 총 이용인원이 감소하고 추세에도 젊은 연령층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등 젊은층의 사회적 빈곤 · 고립의 문제가 시설이용조사 결과에도 크게 반영되고 있다.

3. 장애인 이용자의 현황

또한 장애가 있는 이용자가 407명에서 598명으로 1.5배 증가했다. 정신분열증, 양극성 기분장애, 알코올, 마약, 지적장애, 발달장애 등 조사결과 모두 증가했고, 유일하게 신체장애로 장애인 등록된 자만 감소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알코올 중독은 109 명에서 173 명으로, 지적장애는 38 명에서 57명, 기분장애가 58명에서 64명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눈에 띄는 추이는 각성제 등의 약물 사용 경험의 있는 이용자가 20 명이었던 것이 67 명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알코올, 마약, 도박, 게임중독, 성적(性的)의존 및 도벽 등 각종 중독으로 사회생활적응을 위한 난관에 부딪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발달장애나 정신장애가 있거나, 젊은층 중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학력이 뒷받침 되지 않아 더욱더 사회에서 설 자리를 잃고 배제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죄를 짓고, 자립 및 자율(自律)의 어려움으로 사회로 다시 돌아갈 포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막혀 버리는, 악순환에 빠져 버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러 사람 중 다수가 갱생시설의 이용자가 되는 것이다.

4. 생활곤궁자 지원의 새로운 제도- 종합상담지원센터가 기능하기 위해

새로운 생활곤궁자 지원·대책이 국가 시책의 큰 기둥으로 부각되고 있다.

"생활지원전략(生活支援戦略)"수립을 위한 움직임과, 이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종합상담지원센터"의 설치가 속속 진행되고 있다. 단, 형무소 등의 시설을 출소한 사람의 지역 생활을 지원하는 법무부의 "지역정착지원센터"의 제도와 이념도 그러했지만, 유능한 인재를 길러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그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회사업/복지의 담당자와 다양한 NPO 지원 단체, 지역을 포함해 모든 사회적 생활지원을 맡고 있는 곳이 그 사업의 목적과 이념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당사자 주권이란 무엇인가, 그 근원적 추구와 사용자(user), 소비자(consume)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원점으로 돌아가서 사회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사업을 전개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새로운 틀을 마련하는 가운데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어떨지의 열쇠가 되는 것은 아닐까.

21 15:20～15:40

	사업, 활동 소개
발표자１　영어표기 소속、간략한 경력	오카모토 토모하루 사단법인　오사카 희망관 지역연계담당 (오오요도 엔(縁)파워네트 사무국장) １９５２년 출생. 공립중학교 졸업 후, 다양한 직업과 지역을 전전 ２００６년 ２월부터, 오사카시립 홈리스 「자립지원센터 오오요도」의 에프터 케어 담당 상담원으로 활동 ２００７년 ４월부터 「갱생시설・大淀寮」의 통소사업(에프터 케어)상담원. 현재, 오사카 희망관 운영협의회 사무국 직원, 요리소이 넷 오사카(복지 지원을 필요로 하는 교정시설 등을 출소한 사람을 위한 자립지원 오사카 네트워크) 사무국 직원, 사단법인 Ｍｅ２ (취업지원센터 아스라쿠토 운영) 의 감사로 겸직중. 일본복지대학 경영학부 졸업.
발표２　영어표기 소속、간략한 경력	
임무, 업무내용 간략한 연혁	오사카 희망관 (거주지와 직장을 잃은 사람을 위한 재출발 지원센터)는 2009 년 7 월에 연합 · 오사카 Japanese Trade Union Confederation, OSAKA, 부락 해방 동맹(部落解放同盟), NPO 카마가와사키(釜ヶ崎)지원기구, 갱생시설 ·大淀寮, 오사카시립대학 도시연구프라자 교원 및 불교, 가톨릭, 금광교, 新宗連(신일본 종교단체 연합회)등의 종교 관계자, 시민단체 관계자의 요청으로 결성된 운영협의회로 활동을 시작, 상담센터 1 곳과 지원실 6 개로 출발했다. 홈리스 및 지원이 없으면 홈리스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 생활곤궁자의 취업·생활·주거의 일체형의 반주형 지원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실시해왔다. ·노숙 전에 찾아, 공적 세프티 네트워크로 연결될 때까지 긴급숙박과 식사 등을 제공하여 재출발을 지원한다. ·재출발의 방향과 방법을 함께 모색하고, 생각할 시간과 장소를 제공한다. ·입소 중에 의료/진료·취업상담·복지생활상담 등 각종 상담을 실시한다. ·취업지원사업을 실시해"일하는 패턴"을 만들고 일정한 수입을 제공한다. 재출발 후에도 일과 생활에 불안이나 고민에 봉착했을 때,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오고 있다.
대상지역, 대상자 이용자	주로 젊은층의 주거상실, 불안정 취업자로 오사카에서 생활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상담센터가 있는 오사카 북부의 "天六"지역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회 등 사회 자원과 협력하면서 연계 사업을 하고 있다. 특히 갱생시설·大淀寮가 있는 토요사키 히가시(豊崎東)지역의 지연·주민단체와 긴밀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 운동의 사회적 사명	일도 거주지도 없는 재출발과 자립을, 민간의 힘을 결집하여 지원하고 그런 사람들이 지역에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포괄형 지역 세프티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단체와 협력하여 재출발한 사람들이 지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참가형의 "상호부조"라는 새로운 형태의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한다. 또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는 "인적연계"로, 생활곤궁자 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인적연계"에서 만들어 내가고 있다. 또한 오사카 희망관의 활동 중에서, 지역재생을 목표로 하는 "하비키노 희망관(羽曳野希望館)"이나, 종교인이 중심이 되어 지지해나가며 마을 만들기를 추구한 "지연(支縁) 마을 네트워크'등이 탄생했다. 오사카 희망관도 연계해 온 다양한 지역 세프티 네트워크 만들기가 "아무도

	사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지역의 재형성으로 나아가며, 또한 "오사카의 마을이 안전망(safety net)이 된다"와 같은 인식을 확산시켜 간다.
사업, 운동의 사명 및 법적/재정적 근거 등	자체 재원을 기초로, 운영협의회를 구성하는 단체·개인의 후원금을 원천으로 운영한다. 동시에 여러 보조금 및 조성금을 받고 있다.
실제 운영, 경영 등	오사카 희망관 운영과 관련해, 구체적인 지원은 상담센터를 중심으로 이뤄지며, 조직전체의 운영은 운영협의회 사무국에서 한다. 또한 공적(公的)조성 관련은 "일반 사단법인 오사카 희망관"이 담당, 민간의 기부나 지원 등은 운영 협의회가 담당하는 "공존"도 생각하고 있다. 조사 연구 등은 오사카 시립 대학 도시 연구 플라자와 그 동안의 활동에서 관계를 가져온 연구기관들과의 연계 속에서 실시하고 있다. 현장 경험이 행정 시책과 공생해 가려면 "이야기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경험의 축적을 "창고에서 먼지 쌓이지 않게" 하기 위한 발신력이 필요하다.
과제, 요망, 제안 등 정책적 제언 포함	정부의 생활지원전략인 "생활곤궁자지원(生活困窮者支援)"과 오사카 희망관의 사업이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나가가고 있는가? 홈리스 자립지원법의 향후는? 취업은? 주거는? 생활보호는?- 검토 과제는 다방면에 걸쳐 있다. 홈리스 및 지원이 없으면 노숙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 생활곤궁자 "주변"에는, 지원시스템구축의 움직임이 "바쁘다". 그러나 지원 현장에서의 경험이 어떻게 반영될지는 불투명하다. 현재 다양한 상담 사업을 하고 있다. "상담사업"라고 이름 붙여지는 것에, 얼마만큼의 비용이 사용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는 것인가. 구체적인 제도의 축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생활곤궁자지원"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다. "옥탑방"을 짓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발표에서 특히 언급하고 있는 이슈에 대해	오사카 희망관에서는 취업 지원· 생활지원 등 노력하고 있지만, 당사자가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이 세상 속"에서 나가는 의미에 주목하고 싶다. 사회적으로 "포괄"된다는 당사자 시각에서 보고, 일종의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에 참여하는 것"= "이 세상 속"에 들어간다는 것에 주목하고 싶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을 어떻게 마주 볼 것인가. 요즘 "지역생활정착"이라는 말이 "붐"이다. 그렇다면 그 핵심은 과연 무엇인가. 시끄럽지 않게, 조용히 살면 되는 것인가? 위와 같은 시각에서 오사카 희망관의 지역연계사업 "오오요도 엔 파워 네트"의 임무와 사명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22 9:20~9:40

김미정 도시재생의 새로운 모델 두꺼비 하우징

기존 도시재생
전면철거 방식의 폭력적 재개발

개발이익의 사유화
사회적 형평성 부족
획일적인 제도 적용
낮은 원주민 재정착율
기존 도시공간과 단절
도시경관의 황폐화
관련 주체간 갈등 심화 (조합, 조합원, 세입자, 건설사, 정부)
공공의 편파적인 역할
주민참여
.
.
심각한 인권유린,
폭력적 강제철거, 강제이주

도시재생의 새로운 길 " 이윤보다 인간을"

재개발에 대한 대안 필요
2010년 은평구청과 시민단체, 지역활동가, 전문가 회의를 통해 논의
장수마을 대안개발연구모임 활동가들이 주도

사회적 기업 **두꺼비하우징**
"두껍아두껍아,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정주권 확보
공동체 재생
노후 주택, 기반시설 정비
일자리 제공
관계망 구축
.
.
2**0년 12월 3**일 설립, A**설시작

서민 중심의 점진적 도시재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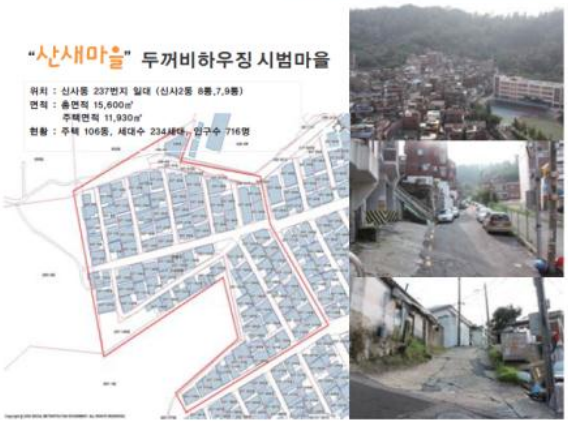
주거성능향상
: 주택에너지성능향상
: 리모델링
: 주택관리
골목, 가로환경 개선
: 기반시설 정비
공동체 공간 조성
: 커뮤니티 시설
: 마을 사랑방

마을 만들기
: 마을학교
: 주민 모임
: 물욕 만성희
마을 공동체 조성
: 도시텃밭 가꾸기 등

네트워크 구축
: 주민 재능 발굴
: 지역상공인 참여
일자리 나누기
: 지역 자원 활용
Community Business
: 마을기업 모으기

"산새마을" 두꺼비하우징 시범마을

위치 : 신사동 237번지 일대 (신사2동 8통,7,9통)
면적 : 총면적 15,600㎡
주택면적 11,930㎡
현황 : 주택 106동, 세대수 234세대, 인구수 716명



" 굴러다니던 해골을 꿈 삼아 차고 다니고 괄적으로 다리를 삼고"

마을 기원과 역사

- **옛지명** 새력골 : 조선시대 나이 들어 은퇴한 내시가 살던 마을
  고택골 : 감옥과 처형장이 있어 골로 간다는 말의 유래가 됨
  못나무골 : 싱그러운 나무가 울창한 골짜기
- 토지구획정리사업 후 수해이재민, 철거민들의 이주와 마을 형성
- 1890~1990년 대규모개발 : 다가구, 다세대주택으로 신축 → 지금 모습
- 사방이 모두 재개발되거나 대부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됨.
  재개발에서 제외되고 사회적 배제, 상실감, 소외를 느끼고 있다.

"오래된 주택이 밀집에서 재개발을 통해 좀 더 나은 집에서 살기를 바라는 거지. 겨울이면 몸서리칠 수 없을 정도로 춥고 여름이면 한증막에 있는 듯한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따뜻하고 시원한 집이 필요한 거지"

" 민,관 거버넌스 "
산새마을학교, 마을종합계획안 만들기
2011년 경관가꾸기사업지역 지정 : 마을계획은 주민 스스로
2012년 주거환경관리사업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 선정
마을 안 공용주차장 신축 : 120대
도시농업을 위한 텃밭조성 : 사유지 매입

빈터를 텃밭으로…
쓰레기로 가득한 개 사육장이던 곳을 주민들이 힘을 모아 치우고 꽃과 채소를 가꾸었다.

헌옷 모아 마을기금

수세미 만들고 판매,
방법이 취약한 저층노후 주거지의 안전을 위해 스스로 지킴이활동,
텃밭 가꾼 채소로 마을 주민과 비빔밥 축제

사랑방, 골목반상회……

마을기금으로 사랑방 운영, 씨앗학교 아이들과 게시판 만들기,
목공교실로 텃밭에 의자만들다, 산새마을 영화제, 골목마다 반상회, 마을을 계획하다

산새역단 건축상담, 우리집 문제를 같이보자

비가 새고 곰팡이 피는 집 어떻게 고쳐야 할까?
열화된 구조물 안전할까? 스스로 고치는 방법을 무엇일까?
전문가와 함께 한 건축상담

취약계층 무상 주택관리

수도꼭지에 물이 새고 형광등이 고장나도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무상 주택관리하다. 두꺼비하우징 사회공헌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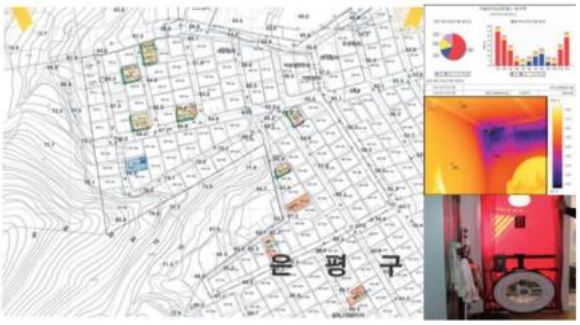
내 집은 스스로 고친다.

춥고 더운 센 집, 따뜻하게

노후주택 외단열 공사로 난방비를 반값으로 줄이다.
곰팡이 피고 교류가 없던 집이 따뜻한 단열공사, 내장 공사로 이웃과 소통을 시작하다.

전문적인 에너지진단으로 주택성능 높이기

전문적인 에너지 진단으로 에너지 성능 목표를 설정하고
적정 공사비를 통해 실현하기



22 **9:40~10:00**

저소득 주택지역 재개발에 대한 사고
: 타이페이시 안캉핑자이(安康平價住宅)를 사례로

첨준걸 도시개혁전문조직 부비서장
Chun-chieh Chan, Executive Secretary, The Organization of Urban Re-s
Email:schumi20001234@gmail.com

안캉핑자이(安康平價住宅)는 타이페이시의 핑자이(平價住宅;임대주택) 중 주택 수량이 가장 크고 밀집된 임대주택지역이며, 현재 건물의 노후화와 저소득가구의 밀집된 주거환경으로 인한 심각한 낙인화(Labeling)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에 타이페이시 시정부는 2012 년 기존 주택수량인 총 1024 가구를 3300 가구 규모로 재개발 할 것을 선포하였다. 본 문은 타이완의 저소득주택 재개발 정책에 대한 건의와 이 후의 사업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타이페이시 저소득 임대주택 및 안캉마을의 재개발

핑자이 주택(平價住宅)은 타이완 정부가 1970 년대 임시적으로 건설한 공공주택정책으로서, 입주대상은 사회국에서 인정한 저소득 가구를 위주로 입주 신청이 가능하며, 임대료가 없이 관리수리비 300 원 대만달러를 받는 형식으로 제공된다. 현재 타이페이시 전체 핑자이주택은 1544 가구이며, 그 중 1024 가구가 안캉지역에 위치해 있어 안캉마을이 가장 수량이 많고 밀집된 핑자이 주택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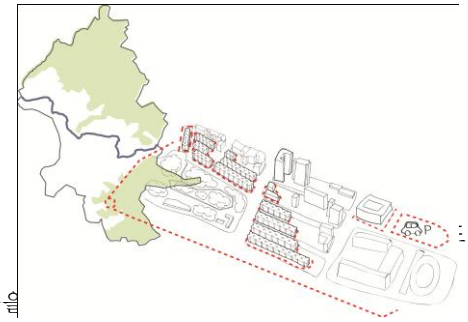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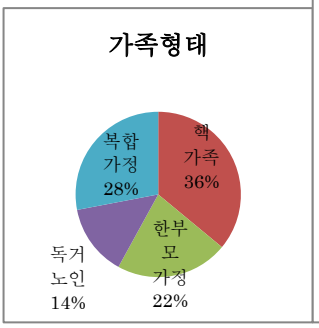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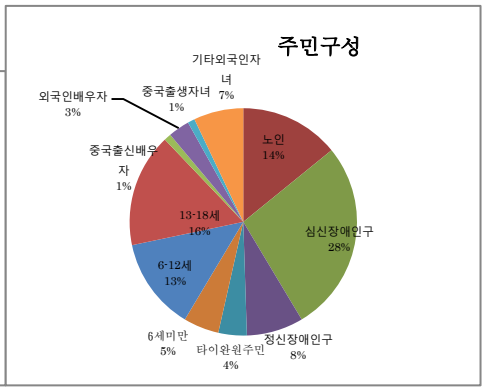
그림 2 안캉마을

(자료참고 : 타이페이 시정부 사회국, 2012)

안캉핑자이는 2 가지 유형의 주택규모로 되어 있으며, 단지 내에는 도서관, 탁아소, 주민센터(活動中心), 사회서비스사무실(服務站, 社工員辦公室)과 야외농구장 등이 구비되어 있다. 현재 거주가구는 806 가구로 가족형태와 주민구성비율은 그림 2 와 같이 가족구성 유형이 단순하지 않으며,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심신장애 및 청소년 등 사회관리가 요구되는 구성원이 많은 편이다.

안캉핑자이의 단지조성 후 30 년이 지나면서 건물 노후화와 저소득가구의 집중으로 인한 낙인현상이 나타나게 되었고 재개발의 필요성이 각계에서 점차 대두되었다. 또한 다른 지역의 시정부 공영주택 개발이 주변지역의 마찰에 의해 어려움을 겪게 되자 상대적으로 마찰이 비교적 낮게 평가된 안캉지역의 재개발이 우선 추진 가능해졌다.





2012 년 5 월 마침내 타이페이 시장이 3300 가구 공영임대주택 재개발을 선포하였고, 1/3 의 저소득 원주민가구와 2/3 의 청년가구[2]에 신청자격을 부여했다. 입주대상, 임대관리와 운영에 관한 관련 법규, 임대료, 건축규격 등을 정하고 시정부가 계획과 비용을 담당하며 분구를 나누어 분기별 개발방식으로 제 1 기의 개발은 2014 년에서 2015 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본 조직의 개입내용과 입장

본 도시개혁전문가조직 OURs 는 2011 년부터 안캉마을의 재개발에 관심을 기울여왔으며 시정부와 여러 차례에 걸쳐 건의와 토론회를 계속해오고 있다. 현재 거주하는 저소득가구의 권익에 관한 문제제기와 현장 방문 조사, 시정부의 보조로 국내외 전문가와 '안캉공영주택 국제워크숍' 개최 등 정책개선에 대한 건의를 해왔다.

간단히 말해 시정부의 정책에 대한 개선점은 다음 두 가지이다. 우선 건설적인 정책만 계획하지 말고 입주대상, 임대료, 임대기간, 운영방식, 복지서비스, 마을만들기 등 부수적인 계획을 세울 것과 전체적인 계획에 주민의 의견을 우선 시한 정책 방식을 요구하는 바이다. 실예로 시정부가 주최한 주민초청 기자회에서 여러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뒤, 다음 날 주민의 신의를 얻었다는 내용만 신문보도에 계시하였고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선계획에 대한 정식 주민설명회조차 가지지 않고 있다.

3. 정책건의와 행동전략

앞서 기술한 조사연구에 의하면, 정책개선 사항은 다음 내용과 같다. (1)입주대상, 실내유형, 임대료, 임대기간을 약세 계층의 부담 능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2)계획 설계과정에 주민

[2]根據臺北市公營租住宅規定，入住對象為 20-40 歲青年家戶，申請本人、配偶與同戶籍者均無自有住宅，家庭年收入於 50%分位點以下(2012 年為 148 萬新臺幣)。

참여를 반영할 것 ; (3)건설, 복지 취업, 교육, 마을만들기 등 정합적인 계획을 관리하는 단위를 설치할 것; (4)계획일반에 대해 주변지역 주민과 이해를 같이할 것 ; (5)마을만들기 및 공공예술을 이용한 사회배양력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것 등이다.

그러나 이런 건의들은 본 조직의 전문가, 민간단체 관계자들과 수 차례 회의와 토론 경험상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압력이 형성되어야 정부에서 수용한다는 것과 이러한 건의들이 약세주민의 충분한 공감과 이해를 거쳐야한다는 점을 체험하였다. 그리고 이 후의 행동계획은 약세주민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공실주택을 이용해 작년부터 정기적으로 주민과의 활동과 토론, 자료연구 등을 하고 있다.[3]

올 해 진행될 주요 활동으로는 마을신문발행으로 소식을 전하고 보도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며 다음 내용과 같다.

(1) 지속적인 마을정기 토론회 개최 (2 주 1 회) , 재개발계획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이해를 나눌 것.
(2) 적극적으로 외부와 교류하여 마을의 배양력을 강화할 것(청소년지도, 공공공간개선, 도시농촌사업 등).
(3)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정부의 개선정책에 대응할 것. 특히 올해 제 1 기 건설에 대한 주민참여설계와 임대료 산정 등 의제에 대해 정부와 대화할 것.

4. 결론 : 본 계획으로 미래 사회주택건설의 시범계획지표가 되게 할 것.

본 계획은 타이완의 사회주택추진에 있어 지표성을 가진 사례로서 민간단체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입주자의 수요에 맞는 공간계획과 운영관리서비스를 확보하며, 사회주택에 대한 편견을 개선한다는 한다는 의미에서 미래의 다른 계획에서 참고될 주요 사례가 될 것이다.

[3]如協助修繕的營造公司、外牆美化的油漆公司等。

22 10:00~1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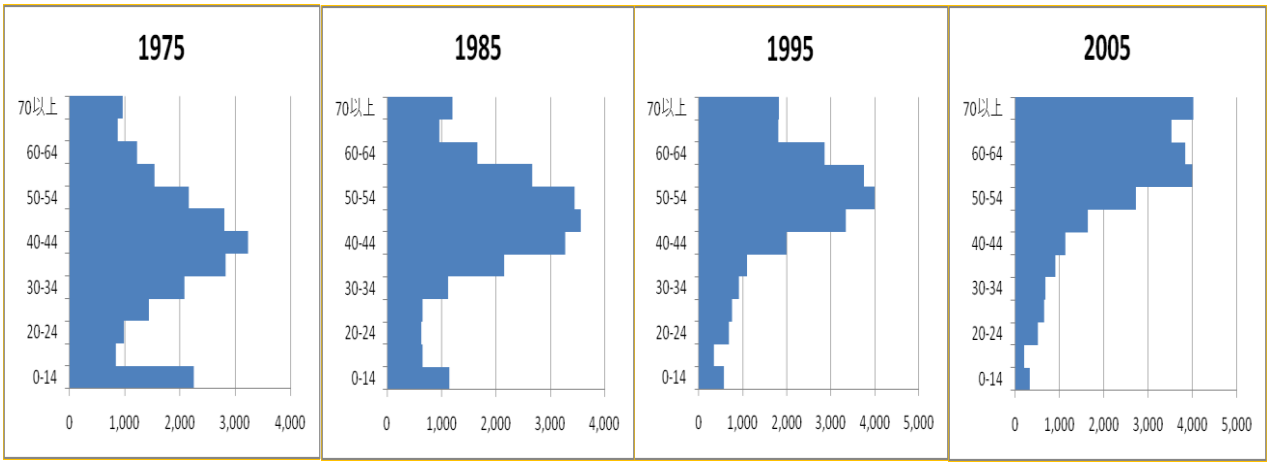
단신고령남성집주지역「아이린 지구」의 니시나리 시민관의 실천

사회복지법인 이시이기념 아이젠엔
지도원 시라하세 타츠야

[지역 개요】

1. 오사카시 니시나리구 북동부에 있는 0.62 ㎢의 지역. 니시나리구의 8.4 %를 차지한다.
2. 고도경제성장기 (1955-1973)에 일용직 노동력의 매매가 행해지는 "요세바(寄せ場)"로 활성화.
3. 1961 년 이후 폭동을 계기로 행정 치안 대책이 강화. 1966 년 "아이린 지구"지정.
4. 1960 년대 후반, 오사카 슬럼 대책으로 아이린 지구에 살던 가족 가구를 다른 지역의 공영주택에 입주 알선.
5. 아이린 지구는 고도 경제 성장기에 "가족"이 감소. 다른 지역에 유례없는 '남성 사회 "로.
6. 아이린 지구의 남녀 비율 불균형

1985 년 : 23,083 명 (남 18,061 여 5,022 명)



2005 년 : 25,241 명 (남 21,512 여 3,729 명)

출처 오사카시립대학 도시연구프라자 『아이린 시책 검토 보고서』 (2012)

7. 1990 년대 이후의 일용 노동자 구인수 격감으로 홈리스가 급증. 1990 년대에는 1000 명 이상의 홈리스가 지역에서 생활. 1990 년대 후반에는 아이린 지구의 홈리스 문제가 오사카 전역의 문제로 확대됨.
8. 2000 년경부터는 노인 일용직 노동자와 홈리스를 대상으로 생활보호신청을 지원하는 사회 운동이 활발해져, 생활보호수급자가 급증.
9. 생활보호수급자의 증가속에, 아이린지구는 비정주(非定住)공간에서 정주(定住)공간으로 변질.
10. 최근에는 높은 생활보호수급 비율 (30 %이상), 높은 고령화율 (약 40%)이 사회문제화 됨.
11. 최근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생활보호를 신청하는 한편, 근로가능 연령층의 취업지도를 강화함. 그러나 생활보호수급자의 "일반노동시장"의 재참가는 어려운 상황.
12. 2012 년에 오사카시가 "니시나리 특구 구상(西成特区構想)'을 내세워 아이린 지구를 비롯한 지역의 다양한 문제 해소 및 대규모 재개발로 인한 지역 재생을 검토.

【니시나리 시민관의 시설개요】

・니시나리 시민관 (大阪市西成区萩之茶屋 2-9-1)
・1971 년에 오사카시에 의해 설립.
・2007 년 이후, 지정관리자제에 의해 운영주체가 오사카에서 사회복지법인 이시이기념 아이젠(石井記念愛染園)으로 변경. 민영화 이후 기존의 「대실」기능에 추가적으로 「상담업무」, 「레크리에이션」, 「지역 복지를 추진하기 위한 정보 제공 등」을 강화.

【니시나리 시민관의 사업개요】
지역주민의 「머물 곳 만들기」「친구 만들기」「삶의 보람 만들기」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4 가지 사업을 전개
① 상담(일체 상담)
② 레크레이션(탁구, 노래방, 문화제 등)
③ 대여사업
④ 지역복지를 추진하기 위한 정보제공(연구회, 학습회 등)

【니시나리 시민관의 상담사업】
① 생활거점에서 가까운 상담창구로서의 기능
② 근황보고에서 빚 문제, 경제 문제, 인간 관계 문제 등 심각한 상담까지 폭넓게 대응.
③ 필요에 따라 전문기관 (법무사 사무소, 연금 사무소 등 관공서 등)와 연계하여 지원을 전개.

	년간 상담(연)	상담자 중 고령자 비율	상담자 중 장애인 비율
2009 년도	450 건	25.8%	8.4%
2010 년도	909 건	18.6%	16.3%
2011 년도	1092 건	17.3%	25.2%

※ 2011 년도 상담내용(경제・생활 : 48%, 복지서비스 : 18%、보건・의료 : 12%)

【니시나리 시민관의 과제】
① 어려운 재정 상황 따라서 인적/물적/재정 부족.
② 지역의 고령화율에 반해 barrier 가 많은 건축 구조로 되어 있다.
③ 니시나리 시민관의 "상담"업무는 높은 니드에 대응 가능한 높은 문제해결 능력이 있으나, 오사카・니시나리 지역의 공공 부문과의 연계는 불충분. (민간 부문과의 연계는 긴밀)
④ 지역주민에게 열려있는 니시나리 시민관의 "레크레이션"은 다른 곳에는 없는 드문 사업이지만, 실제로 수십 명의 한정된 사람만 이용하는 상황. 니시나리 시민관이 "머물 곳 만들기" "친구 만들기" "삶의 보람 만들기"의 거점으로서 지역 주민에게 아직 제대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
⑤ 대여업무와 관련해, 지역주민의 이용이 적고, 커뮤니티 형성의 거점으로서 충분히 기능하고 있지 않다. (구 주민과 새로운 주민간의 부조화)
⑥ 아웃리치 활동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의 "숨겨진 니드" 발굴이 불충분
⑦ 최근 오사카의 "아이린 대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니시나리 시민 관의 사업이 향후 어떻게 자리 매김될지 미확정적 요소가 많다.

22 10:40~11:40

기조강연 **오쿠다 토모시** NPO 홈리스지원 전국네트워크 이사장

일본정부의 생활지원전략 및 홈리스 지원: 향후 일본의 세프티넷 전망

일본에서 국가가 실시한 최초의 홈리스 실태조사는 2003년 1월에 실시되었다. 이는 그 전년도인 2002년에 홈리스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된 데 따른 것이다. 이 시기에 확인 된 홈리스 수는 약 25,000 명. 이 수는 "선진국"라 칭하고 있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숫자인데, 이는 법률에 명기 된 "홈리스 정의"에서 초래된다. 일본의 홈리스자립지원법의 홈리스는 "노숙자"로, 실제로 야외에서 자고 있는 사람에 한정되어 있었다. 안정된 주택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야외 생활까지는 하지 않는 사람은 제외된 것이다. 지난해 실시된 국가조사에 따르면 홈리스 수는 약 9,500 명으로 10년 동안 절반 이하로 줄었다. 하지만 이 수치를 가지고 일본의 빈곤문제가 호전되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홈리스지원전국네트워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홈리스실태조사에 따르면, 홈리스 상태, 즉 안정된 주택이 없이 공식/비공식적인 지원을 받아 자립하는 사람의 수는 연간 40,000 명 이상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 약 50 %가 "노숙 경험 없음"이라고 답하고 있다.

이 배경에는, 1990 년대 중반 이후 일본의 취업구조가 크게 변화한 점이 있다. 1980 년대, 이른바 일본형 가족경영하에 종신고용(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비율은 전체의 80 %를 넘었다. 그러나 현재 종신고용 비율은 65 %까지 떨어졌고, 비정규직이 35 %를 차지하게되었다. 특히 24 세 이하의 노동인구로 보면 남성중에는 40 % 이상이 비정규직이고, 대학졸업에 맞춘 일괄 채용의 고용 형태는 이미 무너진 상황이다. 현재 연수입 200 만엔 이하의 근로자가 전체의 30 %에 달하는 등 빈곤은 확대되고 있다. 홈리스가 10,000 명에 이르고, 특히 2000 년대 후반이후 비정규직이 "경기의 안전밸브'로 기업에 활용되는 가운데 안정적인 고용층인 종신고용계층과 홈리스 사이에 "불안정 중간계층"이라고도 불리는 취업계층이 나타났다. 일본의 고용자 수는 약 5,500 만명으로, 이 "불안정 중간계층"은 2,000 만 명을 상회하고 있다. 그 중 0.5 %를 "노숙의 우려가 있는 사람"이라고 가정하면 이 수치만 해도 10 만명 규모의 홈리스 예비군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향후 일본의 홈리스 지원은 국가에 의해 제정 된 "노숙자"에 한정하지 않고, 이 "불안정 중간 계층"을 얼마나 조기에 파악하고 대응할지가 핵심과제가 될 것이다.

이 흐름속에, 일본에서는 2013 년부터 새로운 안전망 safety net 구축되려 하고있다. "생활지원전략"이라는 새로운 곤궁자 지원제도의 특징은, 생활곤궁자를 "경제적 곤궁" 그리고 "고립"상태에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사회적 배제라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으로 설치되는 것이 지금부터 소개할 상담센터이다. 상담센터에서 실시되는 지원은 "반주형(伴走型, 밀착형)지원"이라하며, 수직적이 아닌 포괄적이고 개별적인, 게다가 지속적인 코디네이트 지원을 한다. 생활보호사무소가 전국에 1300 개소 있는데, 이와 동일한 수준으로 생활곤궁자 상담센터를 설치 할 예정이다. 민주당 정권시는 종합 상담지원센터라는 명칭(안)안이었으나, 종합이라는 말이 대상자의 모호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자민당 정권에서는 명칭을 바꾸려 하고 있다. 그러나 생활보호사무소와 이 상담센터의 관계가 아직 애매해서 어떤 방식을 취해나갈지는 검토과제이다. 이 검토회에는 홈리스 지원 전국네트워크 이사장인 본인도 포함되어 있다.

이 상담센터와 관련된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상담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자원의 발굴 : 반주형(伴走型, 밀착형) 상담이 고립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지는 말할 필요도 없지만, 그 상담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 자원을 어떻게 지역에서 만들어 낼 것인가가 상담센터의 중요한 역할이다. 개개인에 대한 대응과 더불어 사회에 대응하는 센터를 목표로 한다.

2. 주택수당의 영구화 : 사회자원 발굴에서 제 1 의 과제는 주거지원이다. 여기에는 현재의 주택 수당을 영구화키시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현 제도는 대상자도 한정되어 있고, 기간도 짧아 이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홈리스자립지원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쉘터를 케어지원 쉘터로 바꿔 주택곤궁자를 지원하는 형태도 제안하고 있다. 하우징은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으며, 쉘터 및 지원주택, 숙박소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이 종합센터와 연계가 더 중요해 질 것이다.

3. 사회적취로사업의 창설 : 국가에서 취업준비지원사업과 중간취로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젊은층의 경우 취업곤궁자는 생활곤궁자이기도 하다. 즉 목욕, 식사, 건강관리 등의 생활자립을 위한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 사람들을 일반기업에 취업지원을 하기 전에 NPO 등이 제공하는 사회적노동사무소, 즉 케어지원 직장에서 일정 기간 취업시킨다. 케어지원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며, 국가가 이를 보조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중간취업사업소로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에서의 채용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국가가 이런 중간취업사업장의 창업을 지원하지만, 운영, 비용은 사업소가 독자적으로 조달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에, 실제로 사업소에서 중간취업이 성사될 지는 의문이다. NPO 나 자원봉사단체는 취업준비지원사업소로서의 기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의 취업지원은 기업을 찾아다니고 소개하는 형태로, 제

2 할로워크(취업알선센터)처럼 무료로 취업알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반기업이 그런 역할을 할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NPO 에서 취업 자체를 만들어내고 이 취업을 활용하도록 설계되어있다. 이는 2002 년 홈리스자립지원법에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으나, 2013 년에서 취업 자체를 지원단체가 할 수 있게 되는 커다란 변화가 생긴것이다.

4. 가계재건지원사업소(家計再建支援事業所)의 설립 :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금전관리라고 하는 지원도 중요하다. 많은 홈리스지원단체가 금전관리를 자원봉사로 제공 해 왔는데, 민주당 정권때 빈곤 비즈니스 규제 움직임속에 누가, 무슨 권리로 금전관리를 하는지 비난 받은 적이 있다. 금전관리에 대한 권한이나 자격 등의 정비는 우리 또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본 NPO 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반주형지원사(走型支援士) 연수를 시작했다. 이번에 국가가 가계재건사업을 구축하는 것과 관련해서, 금전 관리뿐만 아니라 소액의 금전 대출 등 종합적인 금전 관리사업소도 생길것이다. 즉, 지금까지의 지원 현장의 현실이 인식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

5. 아동. 청년층 지원 : 아동의 빈곤, 빈곤의 세대 간 이전은 심각한 상황이다. 생활보호세대의 25 %가 부모 세대도 생활보호세대이다. 큰 정책 과제이지만, 후생노동성 및 문부과학성간의 관계도 있고, 어떻게 실시될지 불명확한 부분이 많다. 이상과 같은 새로운 지원사업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실시주체가 된다. 지방분권하에 국가는 법 정비와 예산을 담당하는데 그치므로, 지원단체/ NPO 는 해당 지자체와 협상해야 한다. 지역에 따라 편차가 생길 가능성도 크다. 또한, 전국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포괄 지원센터 등 기존의 큰 조직이 사업위탁을 고려하고 있는 듯하다. 또한 행정직할로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NPO 가 이 사업을 담당 할 수 있을지, 계획수립 및 인력확보, 역량이 되는지 체크될 것이다.

후생노동성 사회보장심의회
생활곤궁자 생활지원방안에 관한 최종보고서 2013 년 1 월 25 일
http://www.mhlw.go.jp/stf/shingi/2r9852000002tpzu-att/2r9852000002tq1b.pdf

Ⅰ 시작하며

Ⅱ 총론
1. 생활곤궁의 현황과 과제
2. 기존 제도 체계와 새로운 생활지원
3. 생활지원체계의 기본관점
4. 생활지원의 구체적인 형태

Ⅲ 새로운 생활곤궁자지원제도 구축
1. 기본 구상
2. 새로운 상담지원 방안에 대해
3. 취업준비를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4. 중간 취업 방안에 대해
5. 할로워크와 일체화된 취업지원의 강화
6. 가계재건을 위한 지원강화에 대해
7. 주거 확보에 대해
8. 아동・젊은층의 빈곤 방지

Ⅳ 생활보호제도의 재검토
1. 기본 구상
2. 지속적인 취업・자립지원과 인센티브 강화에 대해
3. 건강・생활면 등을 중심으로 지원
4. 부정・부적정 수급대책 강화
5. 의료부조 적정화에 대해
6.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체제정비에 대해

그림1 중층적 safetynet (민주당 집권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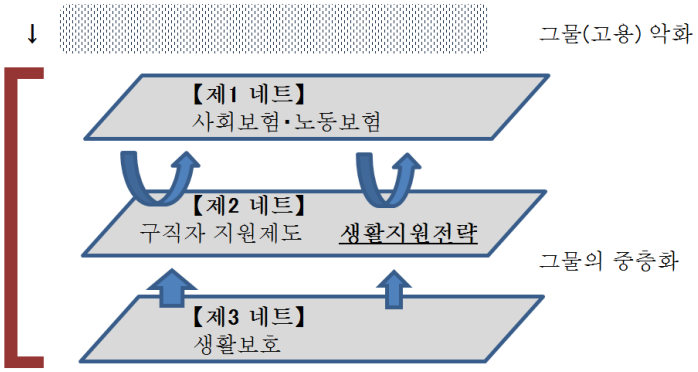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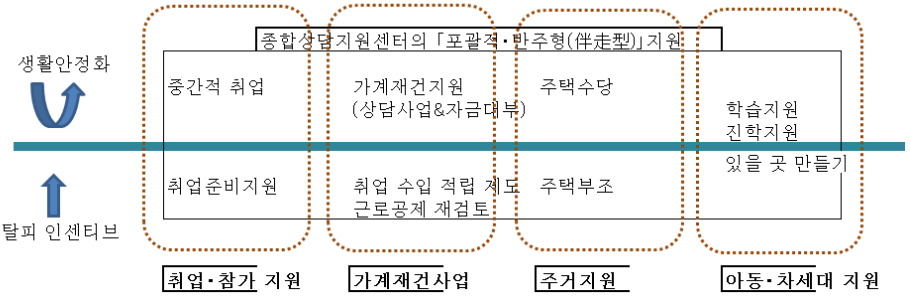


그림2 생활지원전략의 「4개의 화살」 (민주당 집권시、심의회 부회장(안))



22 13:00~13:20

쪽방지역에서의 활동과 대안

박사라(동자동사랑방 활동가)

1. 동자동 쪽방

1)주민 현황

서울 동자동 쪽방 주민은 약 873 명(2011 년 10 월말)으로 쪽방과 비슷한 상황의 주거조건이나 쪽방으로 지정되지 않은 주거까지 포함하면 약 1,000 여명의 쪽방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월세는 20-25 만원, 대부분 보증금이 없기 때문에 빈곤한 사람들에겐 저렴하지 월세임에도 쪽방에 거주하게 된다.

2)동자동 사랑방

동자동 쪽방 주민들의 지역주민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이를 지원하는 단체이다. 주민을 대상으로 빈곤 및 인권 상담활동(복지수급, 주거, 건강관련 상담)을 기본으로 하며, 주민들간의 소통과 마을 소식을 전달하기 위한 마을 신문 <쪽방 신문>을 발행, 주민 편의공간인 마을부엌 겸 도서관인 <사랑방 식도락>을 운영한다. 마을잔치와 영화상영 및 음악공연, 텃밭사업, 연대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1)사랑방 식도락

2012 년 11 월 '사랑방 식도락' 이란 이름으로 쪽방촌에 공동부엌이 생겼다. 26 ㎡ 작은 공간이지만 공동주방, 마을 도서관, 화장실과 샤워공간까지 갖추고 있다. 운영방식은 주민들이 순번을 정해 살림꾼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식사 후 500 원씩 모아서 운영비에 보태고 있다. 한 사람이 누울 공간뿐이었던 쪽방 한 칸, 그곳에서 음식을 해 먹을 엄두를 내지 못하던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음식도 만들어 나눠먹는 재미를 나누고 있다.

(2)건강권 실태조사

2012 년, 동자동 주민회의에서 필요성을 제기하여 쪽방 주민들의 건강권 실태조사가 진행되었다. 동자동과 그 주변 쪽방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심층면담과 면접설문조사가 진행되었다. 주민 스스로 자신의 건강이 나쁘다고 인식하는 경우는 68.4%로 건강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민이 갖고 있는 질병으로는 고혈압, 관절염, 치과질환, 당뇨병, 정신질환 등 종류도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질병을 보유하고 있다. 자살욕구를 갖고 있거나, 불면증에 시달리는 주민도 많다. 실태조사 결과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는 주민이 많지만, 의료현실은 충족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주거, 영양 등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동네 자원이나 주변 환경도 좋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2)사랑방마을 공제협동조합

빈곤한 사람들은 한 달 월세(20 만원 정도)나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처럼 급전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러나 소액이라도 이들이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은 없다. 이에 주민들에게 필요한 급전을 당당히 빌릴 수 있도록 사랑방 공제협동조합이 2011 년 3 월 동자동 쪽방에 만들어졌다. 출자금은 주민들이 함께 모아 3,200 만원 정도였으며, 상환율은 70-78%에 이르고 있다. 협동조합에 가입한 주민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각 오천 원, 만원 씩 돈을 모아 조합을 운영하고 있다. 급한 의료비, 주거비, 생계비 등 돈이 필요한 조합원은 10 만원에서 50 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0 개월 이내에 상환하면 된다.

2. 쪽방 철거

1)동자동 4 구역

동자동 제 4 구역은 일반 주택세입자와 고시원 2 동, 쪽방형태로 운영되는 주택의 세입자 약 150 명 가량이 거주하고 있는 홈리스들의 거처였다. 이 지역은 1978 년 최초로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30 년 간 개발이 현실화되지 않았다.

2)동자동 4 구역 개발사업의 문제점

(1) 무분별한 개발허가

법률은 개발허가 전 행정으로 하여금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과 소유현황' 등에 대해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구청 측은 세입자가 "12 가구" 밖에 없다는 계획을 사업시행자의 말만 믿고 그대로 허가하였다. 그렇다보니 쪽방, 고시원 주민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채 개발이 시작된 것이다.

(2) 개발업자의 이윤 극대화

2005 년부터 기존 건축물에 주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의 경우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세입자의 주거대책,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서울시는 2006 년 이후 최초 개발지역으로 선정된 곳만 해당하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이에, 동자동 제 4 구역은 합법적으로 임대주택 건설 의무를 피하게 되었다. 더욱이 용적률과 층수제한까지 완화되어 개발이익은 극대화되었는데 용적률의 경우 357.06%→996.51%로 약 3 배나 늘어나게 되었다.

(2) 터무니없는 이주보상

법률은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이들의 경우 주거이전비(당시, 약 800 여만원)와 이사비(당시, 약 50 여만원)를, 그렇지 않은 이들도 이사비는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시행사 측은 그 돈의 1/3~1/10 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선심쓰듯 주고 주민들을 내 몰았다. 대다수가 건설일용노동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들로 관련 법과 제도에 대해 무지했기 때문이다.

3)동자동 4 구역 대책위 활동

홈리스행동은 2008 년 4 월, 일부 반빈곤운동단체, 연구단체들과 함께 결합하여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대책위는 우선, 주민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주민들의 실상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주민설명회를 통해 공유하였다. 대학생들과 반빈곤연대활동을 진행하고, 주민모임을 통해 주거권교육과 지역선전전, 요구를 통일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요구(임대주택 보장, 고시원 입실자에 대한 차별 금지, 해당자와 미해당자에 대한 구분 철폐)를 중심으로 구청 측을 상대로 한 집회와 면담, 조합 측, 복지부를 상대로 한 협상을 진행하였다.
그렇게 한 결과 이들은 복지부를 통해 임대주택 대상자에 포함되게 됐고, 조합측을 통해 입주 보증금(100 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다.

4) 그 외 철거사건 개요

시기	지역	개요	사업 유형
2003~2006 년	영등포 1.2 동	. '경부 제 4 녹지 연차별녹지조성계회' 에 따라 이 지역을 철거하고 나무를 심거나 공원을 조성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추진 . 쪽방 260 호 철거. 이주보상으로 공공임대와 주거이전비 선택, 대다수 주거이전비 선택 후 인근 쪽방이주	도시계획시설사업
2006~2007 년	남대문로 5 가	. 고층 주상복합시설 건축 목적. . 400 여호의쪽방이 철거되었으나 법적 보상 책임이 없는 사업유형으로, 가옥주 개인에 따라 상이한 위로금 지급.	도시환경정비사업

3. 서울시 사업: 벽화그리기 및 리모델링 사업

1) 쪽방 벽화그리기

서울시에서 젊은 미술인들의 제안으로 영등포 쪽방촌(5 월)과 동대문 쪽방촌(8 월)에 벽화를 그렸다. 예쁜 담벼락이 그려진 쪽방촌은 예전에 어두운 모습과는 다르게 밝게 바뀌었다. 그러나 벽화그리기는 단순히 쪽방의 겉모습을 화려하게 바꿨을 뿐, 그 속에서 살아가는 쪽방 주민들의 삶과 이들의 주거의 불안정한 상황은 바꿔놓지 못했다.

2) 영등포 쪽방 리모델링 사업

서울시에서 영등포 일대 쪽방 295 가구를 리모델링(안전시설을 설치, 난방 및 단열시설 개선, 공동 화장실 및 주방 등의 열악한 환경개선)하기로 했다. 그리고 건물주의 협조로 5 년간 현재의 임대료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시범가구로 95 가구(쪽방건물 1 동)가 1.2 차에 걸쳐 완공되고 있으며, 나머지 200 개도 주민들에게 추가 신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기로 했다. 현재 영등포 일대는 개발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언제 쪽방을 헐게 될지 알 수 없다. 빈곤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저렴한 쪽방이 없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표피만 바꾸는 리모델링 사업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에 불과하다.

3. 대안: 가난한 이들의 최후의 안식처 지키기

1)쪽방철거 중단

대다수 쪽방은 개발지역 내 위치해 있어 철거에의 위협이 상존한다. 과거 쪽방철거의 예에서 알 수 있듯, 건설업자의 편에 선 개발은 가난한 이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폭력으로 가시화된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쪽방지역 개발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1) 쪽방의 주거자원으로의 재생

현재까지 정부의 대책은 쪽방을 불량거주지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그러나 쪽방은 무보증 월세라는 임차형태의 특성과 교통요지라는 입지적 특성으로 인해 홈리스들의 주거자원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런 경향은 향후 지속될 예정이다. 따라서 쪽방은 물론 지역과 주민을 포함한 재생계획을 마련하여 쪽방지역이 저렴하지만 인간답게 거주할 수 있는 주거자원으로 탈바꿈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1 인가구용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쪽방과 고시원 등 주거취약계층의 절대다수는 1 인 가구나 이들을 위한 임대주택은 다수가 일반가구용 주택으로, 이들의 가구와 경제 형태와 맞지 않아 입주가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1 인가구용 임대주택을 매입, 신축 공급하여 쪽방을 매개로 주거상향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2 13:20~13:40

창 시엔충 타이페이시 사회국 완화복지센터／소셜워커

저가 임대주택자원 협조의 활성화와 유민의 사회복귀 -타이페이시 완화구를 사례로

완화구(Wan Hua)는 타이페이시 서남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멍자(艋舺;Báng-kah)라고 불리웠다. 옛부터 운수가 발달하여 타이페이에서 가장 먼저 발달한 지역이였으나 이 후 상업업무 중심지가 동쪽으로 도시발전축이 이동함에 따라 급속하게 낙후되어 현재 주택가격이 가장 낮은 곳에 속한다.

용산사는 만화구의 종교신앙 중심지로서 1960년에서 1990년대 타이페이교 아래 따차오토우(大橋頭)라는 인력시장(點工;Tiam-kang)이 있어 매일 아침 일거리를 찾아오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또한 공창제도(성매매제도)가 폐지되기 전이라 만화구에는 삼류(三流 : 류망(조직폭력배), 류앙(流鶯;성매매자), 류랑한(건달))이 출현하는 지역이였으며 유동노동자까지 합쳐 사류라고도 불렸다.

위의 사류에 속하는 부류에 저소득자, 심신장애자, 독거노인 등이 많아 타이페이시에서 만화구가 약세계층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이 되었다. 약세인구의 수요에 따라 용산사 500m 주변 서창제, 가림로, 광주제, 서원제, 귀양제 등에는 대량의 임대주택이 밀집되어 있다.

대표적인 저가임대주택인 「야방;雅房」은 개인 화장실, 욕실, 주방, 거실등이 없으며 실내에는 침대 하나, 서랍장이나 의자등만 갖추고 있으며 혼자나 두명이 거주한다. 보통 집주인이 한 층이나 소형건물 하나를 작은 평수로 쪼개어 세를 주는데 방하나에 약 2평에서 4평정도의 규모이다. 월세는 가구나 크기에 따라 한달에 3500-5500원 대만달러(약 12만원~20만원)로 약 1개월에 달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받는다. 수도세 전기세가 포함되며, 에어콘이 있는 방의 경우 전기세를 따로 받기도 한다. 1인당 월세를 기본으로 두 명이 살 경우 500원을 추가한다. 야방은 임대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저소득자들이 주로 선호하며 노숙인이 되기전에 야방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야방의 공간은 협소하나 무소득자인 노숙인의 경우엔 좋은 숙박장소이다. 따라서 유민들이 거주할 조건이 되면, 정부의 보조를 받아 사회로 복귀를 유도하는 저가임대주택 활성화가 진행되고 있다.

타이페이시 시정부 사회국은 소용센터(피난소;庇護所)외에도 임대보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조자격은 주로 세가지로 나뉜다.

1.타이페이시 저소득 자격자, 심신장애자 또는 상해자

2.일자리가 고정적인 자(임대료지불이 가능한자)

3.이미 임대를 하고 있으나 무주소자, 실업자, 질병으로 인한 임대료 지불이 어려운 자**(이미 주요 구조대상)**

경비는 「타이페이시 유민 취업 및 생활복귀 방안(台北市遊民工作暨生活重建方案)」(공익채권) 및 「타이페이 시정부 사회국 긴급구조금(台北市政府社會局急難濟助金)」 등을 통해 지원된다.

임대 보조 방식은 다음과 같다.

1.매월 임대료 보조 최대 6000원(약21만원)

2.매년 6번을 넘지 않을 것

3. 처음 임대할 경우 1개월 보증금 보조

4. 임대료 보조는 사회복지인원의 실제상황평가 후 보조(기타 정부 보조금은 서면상 심사를 통해 보조)

야방의 임대자들은 대체로 소득이 불안정하므로 임대 상황도 불안정하다. 집주인들은 나이가 많거나 호적 등 서류상 복잡한 문제를 처리할 능력이 없어 임대료 수입이 일정한 자를 선호한다. 사회복지인원의 유민임대를 위한 협조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집주인이 사회복지서비스를 신청하도록 호적을 허가하는가
2. 집주인이 유민을 임대자로 허가하는가
3. 임대자가 노인, 심신장애자 등을 위해 병, 입원, 실종등 상황을 보고할 수 있는가.
4. 사회복지원의 보증으로 저렴하게 임대료를 제공할 수 있는가.
5. 사회복지원의 협조는 우선적으로 노인 심신장애등 약세자를 대상으로 하며 상황이 안정되면 자력으로 임대를 구하게 할 것.
6. 필요하다면 사회복지원이 임대문제를 협조할 것.

임대자원의 활성화가 진행된 후 타이페이시 외전 사회복지원의 야방 유민임대 사례는 2년새 150명이 넘었으며, 자원협조하는 집주인은 대략 10명정도이다. 유민임대는 사회에 복귀하고자 하는 많은 유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생활개선을 유도하는 효과를 준다. 그 결과로 임대보조 대상이 50%를 넘게 유지하고 있음을 들 수 있다.

다시 노숙하는 상황을 방지하도록 임대 후 임대주택시장의 상황도 관리해야할 것이다. 정부의 임대보조자원 투입 후 야방의 임대상황도 안정되어 임대료가 상승하거나 저가임대주택시장이 좁아진다면 유민의 사회복귀뿐만 아니라 약세 거주계층의 주거불안정이 발생될 것이기 때문이다.

22 13:40~14:00

彭 揚凱 Peng, Yang-kae OURs 도시개혁조직 비서장 지역×실천

도시 원주민 주택 정책의 대안적 시도 : 뉴타이페이시의 재건 프로그램

1. 배경

1960 년대 타이완의 경제 급속성장시기에 '발전'수요에 따라 대량의 농업인구의 도시이민이 발생하였다. 원주민의 경우 도시의 공장에서 일하거나 원양어업 종사직, 또는 광부 등의 직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고향을 떠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대부분 주택시장안에서 거주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였고 전통사회조직 속에서 '집단관념'을 이어온 원주민들은 도시의 변두리에서 집단 취락을 형성하며 살게 되었다. 에서다. 그러나 거주형태, 재산권, 토지이용 등 한인 위주의 법령으로 원주민 취락지는 정부의 강제이동와 철거를 당하는 상황이였다.

이러한 정부의 강제 철거와 이주방식은 2008 년에 들어 사회 각계의 비평을 받게 되었고 신베이시정부는 임시로 철거방식을 유예하는 행동을 취하였다. 이 후 2010 년 선거로 당선된 주리룬시장은산잉부락과 시주부락을시범 '특별재건축(異地重建)'방식으로 원주민의 주권을 인정하였다.

그림 1 산잉부락 위치도

2. 산잉 부락에 관하여

산잉부락(三鶯部落)은 산잉교 아래 방공용수 구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36 가구에 아메이족 등 약 170 명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주요 소득원은 임시공, 원예농업 등이며 대부분 고정적인 수입이 어려운 형편이다.

3. 재건축방안 내용

신베이시정부 원주민국은 2011 년 도시개혁전문가조직 (OURs)에「산잉부락 재건축기본계획초안; 三鶯部落重建初步規劃基本設計計畫委託技術服務」을 의뢰하였고 현재 시공설계와 행정협조 단계이다. 재건축방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정부는 원주민부락이 속한 공유토지를 원주민 부락의 주택재건축을 위해 사용할 것.
2. 기타 건설 용지 및기반시설, 공공용지 녹화 등의 비용은 정부출자에 의해 마련할 것.
3. 주택용지는 부락법인이 정부로부터 임대하는 방식으로 할 것.
4. 주택건물은 부락이 자력으로 건설하여 건설비용을 줄일 것.
5. 건물 건축비용은 정부보조 (1/3), 부락법인 명의로 저리 융자, 자력모금 등 3 개 부분으로 나누어 출자할 것.
6. 건축 완공 후 부락법인이 주민의 임대료를 관리하며 공공시설은 정부가 부락에

임대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

그림 2 신잉부락 재건축방안

4. 문제점

앞서 기술한 내용은 진행과정에서 원주민과 정부의 수차례 회의에 따른 협상내용이며 집행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새로 도출되었다.

1. 정부행정 입장 : 원주민부락 재건축 방안은 타이완에서 처음 시도되는 시범방안으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법령마련과 조율이 요구됨.
2. 부락 입장 : 주택건물의 건축비는 정부의 출자금이 대부분 예산이 삭감되어 자력 출자금 부담이 가중되었. 또한 소유권이 개인소유가 아니므로 출자에 있어 아직도 어려움이 존재함.
3. 설계 및 건축면 : 원주민 거주형식과 정부가 정하는 법령에 차이가 있어 탄력적인 설계가 요구됨. 예로 원주민 주택은 Open Building 방식은 정부의 획일적인 건축구조방식(기초, 기둥, 외벽, 실내구조 등) 과 다름.
4. 재무관련 : 본 건축방안은 정부의 협조하에 저리융자와 비용절감이 이루어질 예정이나 원주민의 경제능력을 고려하면 아직도 연구가 필요하다. 가구당 매월 약 6500NT (토지임대+ 융자상환+ 관리비; 21000 円) 이내의 상환금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원주민 부락법인이 재무상 위기를 겪지 않도록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22 14:00~14:20

세계화, 사회 불평등과 사회 배제
:타이페이시 만화구의 도시공간정치분석

대만대학건축도시연구소 부교수 황리링

통계에 의하면 타이페이시의 12 개 행정구 단위 중 만화구는 원주민인구, 남녀성비례(남:여), 인구노화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타이페이시정부, 2012). 또한 배우자비율이 가장 낮으나 조혼율이 가장 높고(7.22%) 중국출신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 비율이 가장 높으며(24.16%) 이혼율이 가장 높고 이혼커플 중 배우자가 중국 또는 외국인비율이(3.05%) 가장 높기도 하다. 이외에도 가장 높은 출산율에 비해 사망률 또한 가장 높기 때문에 자연인구증가율이 제일 낮다. 동시에 타이페이시 심신장애 생활보조금을 가장 많이 수령하며, 저소득층이 가장 많이 거주한다. 이상의 숫자들로 볼 때 만화구의 인구구성과 노화정도, 그리고 약세인구의 밀집지역임을 짐작할 수 있다.

만화구의 이같은 차이는 자연현상이 아니라 오랜기간 축적된 발전정책의 결과에 의한 선택성, 차별성이다. 타이페이시 서구(西區)는 1960 년대 초 중화상장(中華商場)의 재개발에서부터 현대식 아파트인 정건주택(整建住宅) 건설, 만화구 지구계획인 「만대계획(萬大計畫)」의 실시 등 당시 정부의 현대화 건설의 주축이 된 지역이었다. 그러나 1960 년 하반기에서 1970 년대 사이 타이페이시의 도시확장발전과 함께 동구(東區)의 신도심개발로 타이페이시 주변 구릉지의 토지관제 해제가 무더기로 이루어 졌고, 서구의 정부투자가 점차 줄어들게 되었다. 1970 년대 동구의 부동산부흥과 함께 부동산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였고 서구의 정책은 현재 만화구의 청년공원부근 대량의 국민주택을 건설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 건설된 국민주택은 1980 년대 실질적으로 군인촌(眷村)의 재건으로 특정 계층만 해당되므로 공공주택으로서의 의미는 없었다. 동시에 서구로 이입된 인구는 원주민과는 차별된 특성을 가졌으며, 특히 청년공원 부근의 공공주택 밀집지역은 멍쟈(艋舺)일대의 발전과는 차이가 있는 국가가 개입한 집단소비의 공간현상(胡皓瑋, 黃麗玲, 2013)이 나타났다.

군인촌의 재건설은 같은 시기에 정부가 선포한 구시가지 환경개선사업과는 차이가 있었으며 1990 년대말 정부의 정책방향은 개인자본주도 하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타이페이시의 급성장시기에 동구에 자본이 축적되었고 서구는 특정 사회집단인 군인촌과 공공주택공간으로 채워졌다. 다른 면에서 보면 서구의 도시기본시설의 균형에도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타이페이의 야채시장과 면적이 큰 공원이 두 개가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시설은 실제 주민의 이용도보다는 전체 타이페이 시민을 위한 장소이다. 상대적으로 멍쟈지역 따리제(大理街)에는 공원시설이 부족하여 국유기업인 제당회사 타이탕의 기숙사 시설을 공원으로 환원하여 이용하고 있다.

세계도시이론에 의하면 저층노동계층의 소득 차에 따라 형성된 계급격차 (class polarization) 및 도시이원성 (duality) 현상이 야기되며, 사센 (Sassen,2001) 은 국가의 사회 재분배정책에 따라 공간정치가 이루어지고, 계급격차의 발전유무가 결정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도시발전과 사회불균형 과정에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취하는가를 반문할 수 있다 (Fainstein,2006) . 타이페이시는 1970 년대 공공자원의 투자가 동구 지역에 집중될 때 타이페이시의 내부 발전격차가 이미 심화되었으며 1990 년대 세계화단계에서 지식정보산업을 동구로 이동시켜 서구의 제조업 중심의 산업발전과 더욱 큰 격차가 벌어졌다. 2011 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만화구의 15 세 이상 문맹율과 대학진학율, 학급대 교사비율이 타이페이시에서 가장 낮아 지식정보산업에 적응하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교육설비가 고도로 발달한 도시는 다안구, 사림구, 베이토우구이며 유명대학교와 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으며 만화구는 유일하게 대학교가 위치하지 않은 행정구역이다. 따라서 젊은 층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고 교육에 기반한 경제 또한 형성되지 못하였으며 시먼딩 일대를 제외하고 만화구로 젊은 층이 이동할만한 요인이 부족하였다. 결과적으로 정부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만화구는 산업과 교육면에서 젊은 층의 유입 인구를 막았음을 증명한다.

1990 년대 이후 세계화 도시발전 방향에서 볼 때 타이페이시의 도시발전은 점점 더 신자유주의의 영향을 받게 되었으며 인쇄, 봉제, 제조공장의 이동으로 인구이동이 일어났고 실업으로 인해 유민이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사회서비스와 종교 봉사단체의 서비스로 집중적으로 만화구에 가장 많은 유민이 머무는 요인이 되었다. 이외에도 타이페이시의 발전정책은 지식경제산업에 발맞춰 사회자본과 문화창의 등의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발전형 국가의 경제구조와는 성격이 다르지만-을 모색하게 되었으나 산업의 단지화, 자료화 성향이 강해져 실제 공간에 경제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워졌다. 만화구의 전체적인 경제활력은 중심을 잃게 되었고 정부투자는 오히려 줄게 되었다. 2010 년과 2007 년의 부동산가격 상승율을 보면 만화구의 부동산 가치가 타이페이시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특히 멍자일대는 더욱 분명하게 경제 쇠퇴현상을 보였으며 타이페이시 경제 재구조에 의한 구시가지의 몰락이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사실상 시정부는 1980 년대에 이미 동구와 서구의 발전차이를 의식하고 있었다. 1990 년대말 시정부는 botton-up 식 정책을 지향하고 마을만들기를 이용한 환경개조계획을 만화일대의 마을 공공공간에 계획하였고 공공 교통설비와 공공시설의 복구관리로 서구지역의 재생을 모색하려 하였다. 당시의 타이페이시 시장은 타이페이시 갱신계획 중 3 대 주요계획의 하나로 만화구의 용산공원, 홍로(西門紅樓)를 재정비하여 젊은 소비층이 모이는 문화창의 산업공간으로 전환하도록 계획한 바 있다.

그러나 시장이 주도한 서구의 멍자일대, 용산공원, 민속공원 및 지하도 등 구시가지

공간재생계획은 실패하였다. 원인은 용산공원의 상점과 노점이 철거되고 원래의 지역특색이 사라지면서 전체적인 공간품질과 이미지를 악화시키게 되었다. 정부는 유민을 위한 저가임대주택 등의 적극적인 복지시설 없이 용산민속공원의 재정비를 진행하여 문제를 오히려 키웠으며 지하도 정비도 원래 상인이 회귀하지 못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오히려 경제발전을 저해하였다. 현재 지하도 공간은 새로운 경제요인으로 지역의 소상인이 들어와 노년층이 이용하는 가라오케와 다도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보피랴오(剝皮寮)의 공간 재생 후 원래 상업업자들은 돌아올 수 없게 되고, 기존 상업공간이 촬영공간과 전시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곳은 본래 지역특성이 가득한 차관(茶館), 목욕탕(澡堂), 구설관(說書館) 등이 들어서 있어 서민색이 강한 지역이었다. 또한 공간재생 후 주변 지역경제도 같이 쇠퇴하게 되어 역사문화의 보존 및 다른 세대가 공존할 수 있는 사회네트워크 공간으로도 활용하기 어려워졌다. 이는 만화구의 지역경제발전의 쇠퇴도 원인이 되었다.

만화구 멍자일대의 핵심지구에 시정부에서 최근 개인에게 도시갱신을 장려하였고 이로 인해 토지소유자들과 건설업자들을 자극하여 부동산 경기를 제고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탄생된 새로운 중산계층은 본 지역의 빈곤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도시갱신으로 인해 저가 임대주택시장은 더욱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촬영장소와 박물관식 보존 전시공간은 단기적으로 사람들은 모이지만, 장기적으로 지방 경제활성과 취업기회를 늘려주지 못할 것이다.

최근 일 이년 멍자지구에는 새로운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0 년 사회주택연맹의 동원으로 사회주택문제가 부각되어 현재 시정부 에서는 청년공원 부근에 사회주택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중앙정부의 영건서는 용산사 보피랴오(剝皮寮) 근방의 용산초등학교(학생 약 500 명) 학원공간을 사회주택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다. 만약 이곳에 사회주택이 건설된다면 이곳의 많은 약세계층에게 임대를 제공할 수 있어 멍자의 도시공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만화마을대학의 교사와 학생들이 2012 년부터 용산중학교에서 보피랴오에 이르는 칭차오항 일대에 약세계층과 함께 공공예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사회배제와 낙인효과에 대항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또한 지방문화 역사학자와 주민들이 함께 만화구의 본래 문화인 인문주의적인 각도에서 회생하자는 서경계획(西京計畫)을 제안하였다. 이들의 활동은 청말기부터 번성한 멍자지역의 상업 문화와 수변공간의 도시발전에 관심있는 젊은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앞으로 문화와 생태공간의 구상을 담고 있는 서경계획은 지역주민들과 상업조직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시정부의 부동산 위주의 경기활성화 정책과 확연히 대비되는 지역재생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결론

타이페이시의 발전은 서구에서 시작하여 1960 년대에서 80 년대 후반기까지 경제 고도성장기에 따른 빠른 도시화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정부의 현대도시관이 실질적인 공간에 이루어졌으며, 지역의 질적인 성장은 무시되었다. 1990 년대에서 지금의 세계화 시대까지 서구는 고령화 심각한 실업문제, 청장년인구의 유출로 가정문제의 유발과 사회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약세계층의 인구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구조가 야기되고 있다. 시정부의 도시재생방향은 현재 만화구가 처한 내부공간의 분화 및 쇠퇴현상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 만화구는 주류 사회문화로부터의 오명화(Stigmatization) 외에 정부의 문화보존정책에도 불구하고 구 시가지의 문화특성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지역에 내재한 문화와 사회네트워크가 「문화보존」과 「갱신개발」이라는 이름 하에 훼손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타이페이시의 구시가지 재생이 가진 부동산식, 박물관식, 디지털소비(影視消費)식의 문화발전전략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회복지와 거주복지 방향의 장기 문화발전을 지향하고 민간단체의 협력방식 등을 통해 지방문화 및 사회의 복구를 위한 새로운 방식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참고문헌

타이페이시정부 (2012) 타이페이시 행정구 주요통계지표 (중화민국 99 년~100 년) 타이페이:타이페이시정부.

후하오웨이(胡皓瑋)、황리링(黃麗玲) (2012) 「타이페이시 난지창지구 정건주택의 공간생간과 사회배제」, 중화민국 도시계획학회 연합년회 발표논문(中華民國都市計劃學會、區域科學學會、住宅學會、地區發展學會聯合年會暨論文研討會報告. 2012 년 12 월 15 일), 타이페이:문화대학교.

Sassen, Saskia (2001) The Global City: New York, London and Tokyo. Princeton University Press.

Fainstein, Susan S. (2006) “Inequality in Global City Regions”. In Global City Regions: Trends, Theory, Policy. edited by Allen J. Scott. New York: Oxford Press. Pp285-298.

台北市政府 (2012)『台北市各行政区重要統計指標 (中華民国 99 年至 100 年)』、台北市政府。

胡皓瑋・黄麗玲 (2012) 「台北市南機場地区整建住宅的空間生産與社会排除」、中国文化大学『2012 年中華民国都市計画学会、区域科学学会、住宅学会、地区発展学会連合年会及論文研討会報告』、2012 年 12 月 15 日、中国文化大学 (台北) 。

Sassen, Saskia (2001) The Global City: New York, London and Tokyo. Princeton University Press.

Fainstein, Susan S. (2006) “Inequality in Global City Regions”. In Global City Regions: Trends, Theory, Policy. edited by Allen J. Scott. Oxford Press. pp. 285-298.

22 15:00～15:30

아리무라 센 (카마가와사키 마을 재생 포럼)

	소개할 사업, 활동 프로필
발표자１ 영어표기 소속, 간략한 경력	ありむら 潜/ ARIMURA Sen ① 1999 년에 카마가와사키(釜ヶ崎) 마을 재생 포럼을 결성, 현재까지 사무국장을 하고 있음. ② 1975 년 立命館(Ritsumeikan)대학 경제학부졸업시부터 2012 년까지, 37 년간 니시나리 노동복지센터 직원으로서 일용직 근로자의 취업 지원을 해옴. ③ 만화가로 일용직 노동자와 노숙자를 소재로 한 단행본도 8 권 출판 함.
발표자２ 영어표기 소속, 간략한 경력	
발표자２ 영어표기 소속, 간략한 경력	
임무, 업무, 연구, 조사의 내용, 간략한 연혁	카마가와사키 마을 재생 포럼은 1990 년대의 구조적 장기 불황 속에서 니시나리구의 급증하는 노숙자 문제와 커뮤니티 붕괴라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1999 년에 시작하였다. 지역 내의 다양한 연계와 주민 합의를 촉진하기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매달「마을만들기광장」)하고, 주민들이 직접 재생계획을 정리해 행정에 제안하거나, 가능한 사업은 커뮤니티 비즈니스화를 도모해 왔다. 알기 쉬운 성과로는 ① 노동운동으로 편중된 발상에서 벗어난 마을만들기 성격을 고취하였다. ② 지역에 200 채 존재하던 간이숙박소의 이용법을 전환시키고, 단신고령자용 서포티브 하우스 지역(10 여개), 외국인 여행자를 위한 국제 게스트 하우스 지역(약 15 개)을 만들었다. ③ 커뮤니티 투어리즘이나 언론에 연수를 통해, 일반 시민에 의한 이 지역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심화시켜 왔다. ③ 지역의 많은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거나 외부에서 불러들여, 긴밀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④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의 ‘니시나리 특구 구상`의 내용안 마련과 관련해서, 지역총괄단체인 ’하기노차(萩之茶屋) 마을만들기 확대회의’와 손잡고, 클리어런스형(clearance,배제형)정책을 저지하여, 보텀 업(bottom up,포섭형) 정책을 채용을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대상지역, 대상자, 이용자	오사카시 니시나리구 카마가와사키(아이린 지역)에 사는 25,000 명의 주민 (중, 5,000 ~ 8,000 명은 일용직 노동자, 9,500 명은 생활보호수급자, 1,000 명은 노숙자와 쉼터이용자. 그 외 상점주 및 일반 주민) 및 지역의 지원 단체 및 공공 기관의 직원, 연구자, 자원봉사자, 저널리스트. 즉, 이 지역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대상임.
사업, 운동, 연구, 조사의 사회적 사명	카마가와사키 지역(아이린 지구)에서,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 재생의 마을만들기를 지원한다. 개개인의 생활과 주거에 대한 지원과 지역 전체의 주거환경개선 지원의 두 측면을 추구한다. 특히, 그 실현과정에서 지역에 살고, 일하고, 경영하고, 봉사하고, 연구하는 등의 다양한 사람들,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관계을 만들어 내는 것을 중시한다. 또한, 행정,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추구함으로써, 주민의 생활과 도시재생을 위한 충분한 지원체제 만들기에 공헌한다.
사업, 운동, 연구	-목적실현을 위해 유연하게 활동 할 수 있도록 임의단체로 유지하고 있다.

조사의사명과 법적/재정적 근거 등	-기금은 회비 및 기부금 외, 커뮤니티 투어리즘의 수익금으로 구성됨. -사업 실시를 위해 조직에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경우는, 해당 단체의 중심 멤버가 2012 년에 설립 한 사단법인 인쿠루시브 시티넷과 협력/보완해 가고 있다.
실제 운영, 경영, 조사방법 등	미션수행 (마을만들기 추진)은 1999 년 이래 매월 개최하고 있는 "정례 마을만들기 광장"을 중심으로 실시하고있다. "2013 년 1 월, 광장"으로 176 번째를 맞이했다. 그 시기, 그 시기의 카마가와사키 지역의 시즌 테마와 게스트 발표자를 설정하고 학습과 토론으로 지역합의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내가는 방식이며, 중간중간에 심포지엄 형식도 취한다. 이 속에서 나온 아이디어에 동참한 사람이 새로운 사업이나 활동 또는 협동 활동을 시작하는 스타일이다. 이런 방식으로 서포티브 하우스와 국제 게스트 하우스 지역도 형성되었으며, 니시나리 특구 구상에 대한 제안(안)도 마련하였다.
과제, 요구, 제안 등 정책적 제언도 포함	2012 년에 오사카 시장이 제창한 "니시나리 특구 구상"의 내용안 마련과 관련해, 같은해 6 월에 시작한 "특구 구상 지식인 회의"에 의장과 다수의 위원을 보내 단기간에 보고서를 완료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본 발표에서 특히 주목하는 이슈에 대해서	2012 년 10 월에 시장이 제출한 "니시나리 특구 구상 지식인 회의 보고서" 중에 8 개 분야 56 항목에 대해 구체적인 제언이 이루어지고 있다. 세간의 예상과 달리, 배제형이 아니라 포섭형이 채택되었다고 자체적으로는 평가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당면한 단기집중대책 (노숙자와 생활 보호자에 대한 지원, 복지나 의료 대책, 노숙의 평화적 해결과 치안 대책) ② 중장기적 대책(육아세대 유치방법, 교육 진흥책, 관광 산업과의 연결과 예술 진흥책) ③ 20 년, 30 년을 내다본 대규모 투자 사업(아이린 종합 센터와 신이마미야 역 주변의 재개발 방법, 하우징 및 마을 만들기 대책) ④ 실시를 위한 타임 스케줄